# 2024년도 국정감사
# 결과보고서

2025. 4.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목 차

1. 감사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1

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 1

나.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 3

4. 감사반의 편성 ····· 5

가. 방침 ····· 5

나. 감사반 ····· 5

5. 감사 일정 ····· 6

6. 주요 감사실시 내용(소관별, 사항별) ····· 10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0

나. 방송통신위원회 ····· 19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35

라. 우주항공청 ····· 38

마. 소속기관 ····· 39

1) 우정사업본부 ····· 39

2) 국립전파연구원 ····· 39

3) 국립중앙과학관 ····· 39

4) 국립과천과학관 ····· 40

바. 위원회 선정 공공기관 ····· 42
1) 한국연구재단 ····· 42
2) (기초과학연구원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 42
3) 한국원자력의학원 ····· 42
4)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42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42
6) 한국인터넷진흥원 ····· 43
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44
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44
9)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45
1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45
11) 시청자미디어재단 ····· 46
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47
13)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47
14) 한국수력원자력(주) ····· 47

바.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 49
1) 한국과학기술원 ····· 49
2)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 49
3) 광주과학기술원 ····· 49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49
5) 울산과학기술원 ····· 50
6) 과학기술인공제회 ····· 50
7)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50
8) 한국원자력연구원 ····· 50
9)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51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51
11) 한국방송공사 ····· 56

12) 한국교육방송공사 ····· 62
13) 방송문화진흥회 ····· 63
1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65

7.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66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2건) ····· 66
나. 방송통신위원회(68건) ····· 75
다. 원자력안전위원회(20건) ····· 81
라. 우주항공청(7건) ····· 82
마. 소속기관 ····· 83
바. 위원회 선정 공공기관 ····· 85
사.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 89

8. 기타사항 ····· 96
가. 일반증인·참고인 출석현황 ····· 96
나. 증인에 대한 질의요지 ····· 106
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요지 ····· 121

## 1. 감사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정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입법, 예산·정책심사에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2. 감사기간

2024년 10월 7일(월) 부터
2024년 10월 25일(금) 까지 (19일간)

##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제3호 해당기관)

| 구 분 | 기 관 명 | 비 고 |
|---|---|---|
| 제1호 해당기관<br>(12개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우정사업본부<br>국립전파연구원<br>중앙전파관리소<br>국립중앙과학관<br>국립과천과학관 | 과학기술<br>정보통신부<br>소속기관 |
| | 방송통신위원회 | |
| | 방송통신사무소 | 방송통신위원회<br>소속기관 |
| |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우주항공청 | |
| | 국가위성운영센터<br>우주환경센터 | 우주항공청<br>소속기관 |
| 제3호 해당기관 |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br>정보통신부<br>관련기관(공공기관) |

| 구 분 | 기 관 명 | 비 고 |
|---|---|---|
| (31개 기관) | (한국연구재단부설)정보통신기획평가원<br>한국과학창의재단<br>기초과학연구원<br>(기초과학연구원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br>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br>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br>(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br>한국원자력의학원[3]<br>국립대구과학관<br>국립광주과학관<br>국립부산과학관<br>한국나노기술원<br>(재)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br>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br>정보통신산업진흥원<br>(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br>한국인터넷진흥원<br>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br>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br>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br>우체국물류지원단<br>(재)우체국금융개발원<br>한국우편사업진흥원<br>(재)우체국시설관리단 |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br>시청자미디어재단 | 방송통신위원회<br>관련기관(공공기관)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br>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br>한국원자력안전재단<br>한국수력원자력(주) | 원자력안전위원회<br>관련기관(공공기관) |
| 소 계 | 43개 | |

3)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포함.

## 나. 본회의승인 대상기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 구 분 | 기 관 명 | 비 고 |
|---|---|---|
| 제4호 해당기관<br>(43개 기관) | 한국과학기술원<br>(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br>(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br>(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br>광주과학기술원<br>대구경북과학기술원<br>(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br>울산과학기술원<br>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br>과학기술인공제회<br>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br>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br>한국과학기술한림원<br>국가과학기술연구회<br>한국과학기술연구원<br>(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국가녹색기술연구소<br>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br>한국생명공학연구원<br>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br>한국한의학연구원<br>한국생산기술연구원<br>한국전자통신연구원<br>(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br>한국건설기술연구원<br>한국철도기술연구원<br>한국표준과학연구원<br>한국식품연구원<br>(한국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br>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과학기술<br>정보통신부<br>관련기관(유관기관) |

| 구 분 | 기 관 명 | 비 고 |
|---|---|---|
| | 한국기계연구원<br>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br>한국전기연구원<br>한국화학연구원<br>(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br>한국원자력연구원<br>한국재료연구원<br>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br>한국방송공사<br>한국교육방송공사<br>방송문화진흥회 | 방송통신위원회<br>관련기관(유관기관) |
| | 한국천문연구원<br>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우주항공청<br>관련기관(유관기관) |
| 소 계 | 43개 | |

. * 종전 공공기관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 연구기관 26곳이 유관기관으로 변경(밑줄 참조)

## 4. 감사반의 편성

### 가. 방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20인)을 단일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실시함.

### 나. 감사반

| 구 분 | 교섭단체 | 위원명 | 비 고 |
|---|---|---|---|
| 감사반장 | 더불어민주당 | 최 민 희 | 위원장 |
| 감사위원 | 더불어민주당 | 김 현<br>김 우 영<br>노 종 면<br>박 민 규<br>이 정 헌<br>이 훈 기<br>정 동 영<br>조 인 철<br>한 민 수<br>황 정 아 | 간 사 |
| | 국민의힘 | 최 형 두<br>신 성 범<br>김 장 겸<br>박 정 훈<br>박 충 권<br>이 상 휘<br>최 수 진 | 간 사 |
| | 조국혁신당 | 이 해 민 | |
| | 개혁신당 | 이 준 석 | |

## 5. 감사 일정

| 일 자 | | 대 상 기 관 | 감사장소 | 비 고 |
|---|---|---|---|---|
| 10.7(월)<br>10:00 | | 1. **방송통신위원회**<br>2. 방송통신사무소<br>3. 시청자미디어재단<br>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국 회 | |
| 10.8(화)<br>10:00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br>**2. 우주항공청**<br>3. 우정사업본부<br>4. 국립전파연구원<br>5. 중앙전파관리소<br>6. 국립중앙과학관<br>7. 국립과천과학관<br>8. 우체국물류지원단<br>9. 우체국금융개발원<br>10. 한국우편사업진흥원<br>11.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br>12. 우체국시설관리단<br>13. 국가위성운영센터<br>14. 우주환경센터 | 과기부청사<br>(세종) | |
| 10.9(수) | | 한글날(공휴일) | | |
| 10.10<br>(목) | 10:00 |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br>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br>3. 한국인터넷진흥원<br>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br>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br>6.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국 회 | |
| | 오후 | 1. **원자력안전위원회**<br>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br>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br>4. 한국원자력안전재단<br>5. 한국수력원자력(주) | | |

| 일 자 | | 대 상 기 관 | 감사장소 | 비 고 |
|---|---|---|---|---|
| 10.11(금) | | 현장시찰<br>- 울산 새울 3호기<br>- 경주 월성 원전 및 맥스터 점검<br>- 방폐장 시찰 | 울 산<br>경 주 | |
| 10.14<br>(월) | 10:00 | 업무현황보고 : ㈜문화방송 | 상암 MBC | 비공개 |
| | 오후 | 1. 한국방송공사<br>2. 한국교육방송공사<br>3. 방송문화진흥회 | 국 회 | |
| 10.15(화)<br>10:00 | | 1. 방송통신위원회<br>- YTN, TBS 관련 증인 | 국 회 | |
| 10.16(수)<br>10:00 | | 자료 준비 | 국 회 | |
| 10.17(목)<br>10:00 | |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br>2. 한국과학기술연구원<br>3.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국가녹색기술연구소<br>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br>5.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br>6. 한국생명공학연구원<br>7. 한국한의학연구원<br>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br>9. 한국표준과학연구원<br>10. 한국원자력연구원<br>11. 한국생산기술연구원<br>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br>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br>14. 한국건설기술연구원<br>15. 한국철도기술연구원<br>16. 한국식품연구원<br>17. (한국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br>18. 한국지질자원연구원<br>19. 한국기계연구원<br>20. 한국재료연구원<br>2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대 전 | |

| 일 자 | 대 상 기 관 | 감사장소 | 비 고 |
|---|---|---|---|
| | 22. 한국연구재단<br>23.(한국연구재단부설)정보통신기획평가원<br>24. 한국과학창의재단<br>25. 한국과학기술원<br>26.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br>27.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br>28.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br>29. 광주과학기술원<br>30. 울산과학기술원<br>31. 대구경북과학기술원<br>3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br>33. 기초과학연구원<br>34. (기초과학연구원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br>3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br>3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br>3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br>38. 한국원자력의학원<br>39. 국립대구과학관<br>40. 국립광주과학관<br>41. 국립부산과학관<br>42. 한국나노기술원<br>43.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br>44.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br>45.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br>46. 과학기술인공제회<br>4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br>48. 한국과학기술한림원<br>49. 한국천문연구원<br>50. 한국항공우주연구원<br>51. 한국전기연구원<br>52. 한국화학연구원<br>53.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 | |
| 10.18(금) | 현장시찰<br>- 지하실험연구단<br>- 천연물 연구소 | 정 선<br>강 릉 | |

| 일 자 | 대 상 기 관 | 감사장소 | 비 고 |
|---|---|---|---|
| 10.21(월)<br>10:00 |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국 회 | |
| 10.22(화) | 현장시찰<br>- 우주항공청 및 KAI<b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사 천<br>창 원 | |
| 10.23(수)<br>10:00 | 자료 준비 | | |
| 10.24(목)<br>10:00 | 1. 방송통신위원회<br>*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 국 회 | [종합감사] |
| 10.25(금)<br>10:00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br><br>2. 원자력안전위원회<br>*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br><br>3. 우주항공청<br>* 우주항공청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 국 회 | [종합감사] |

## 6. 주요 감사실시 내용(소관별, 사항별)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국제 R&D 협력 강화를 위해 보스턴 대사관에 과학 담당 주재관의 파견을 검토할 필요<br>○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과천과학관의 관장이 너무 자주 교체되므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관장직 수행 기간을 확대할 필요<br>○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 전시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우므로 재검토할 필요<br>○ 독도를 드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등 최신 과학 기술을 접목해 독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br>○ R&D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br>○ 무기계약직 연구자의 육아휴직이나 퇴직금 지원을 위한 기관의 간접비 산출 기준 확대를 검토할 필요<br>○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여성과학자 참여 비율 조건을 고려시 여성과학자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필요<br>○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과학기술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작성 경위를 파악하고 잘못이 있다면 제재할 필요<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사이버 정보보안 사고 대응체계가 미비하므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br>○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및 총괄부원장의 비위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br>○ R&D 예산 전반 삭감에도 글로벌 R&D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경위와 문제점 등을 잘 살펴볼 필요<br>○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가간 신뢰 문제와 현장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br>○ 중기재정계획상 R&D 투자 비중을 총 지출 대비 5% 수준으로 복원하는 등 R&D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br>○ 글로벌 R&D 협약서(계약서)에 연구성과의 소유와 분배계획 및 분쟁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발생 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명시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br>○ 글로벌 R&D 예산의 올바른 집행에 대한 파악과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br>○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R&D의 편성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 R&D가 지역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관리할 필요<br>○ 연구 성과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현실에 맞지 않는 출연(연) 통상실시권 의무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br>○ 이공계인력 및 기술의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하므로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br>○ 김형숙 교수와 관련한 정부의 부당한 과제 몰아주기 의혹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br>○ 비전공자인 특정인의 초거대 AI R&D 수주에 대한 의혹 조사 필요<br>○ 출연연 등이 인사평가시 소속 연구자가 등록한 특허를 그 활용도에 관계없이 인사평가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특허의 난립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br>○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조사할 경우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독립성을 갖는 별도 기구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br>○ 과기정통부 청사 화장실에 있는 전범기업 창업자 문구에 대해 제거 등의 조치 필요<br>○ 담배자판기에 가짜신분증으로 성인인증에 되는 것에 대해 대책 마련 필요<br>○ 중고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함<br>○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 해결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관계 법령 등을 정비할 필요<br>○ 중고거래 사기계좌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입법과 권리침해 콘텐츠로 획득한 수익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금융당국과 협의 필요<br>○ 해외 플랫폼에서 유명인들이 광고에 도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 방통위와 협의할 필요<br>○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로 획득하는 수익을 차단·동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 공공앱 UI·UX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프론트엔드 유닛 테스트 등 사용성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범부처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필요<br>○ 과기정통부 소관 주요 기관들의 중국산 CCTV 사용 현황 전수조사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br>○ 출연(연) 보안 관리를 위해 국정원에서 마련 중인 다중계층보안 기본계획 이후 보안체계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 <기초원천연구 정책> | ○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 등 글로벌 R&D 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br>○ 아태이론물리센터의 높은 직원 퇴직률, 폭행사건 발생, 소장의 이사회 사유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 필요<br>○ 컴퓨터 개발 추이를 봤을 때 양자컴퓨팅이 유일한 대안이므로 국가차원의 육성 전략 수립 필요<br>○ 생애기본연구 폐지에 따른 연구인력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br>○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당 기획평가 예산이 38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저조하므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br>○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이후 13년간 3조 원이 투자되었는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br>○ 생명윤리법으로 인하여 연구의 자율성이 제한되므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 |
| <연구성과혁신> |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회계 관리 문제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소상 내역을 상세히 파악할 필요<br>○ 출연(연) 기술료 수입의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인 기술이전 전담인력 조직의 수와 전문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TLO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br>○ 연구개발사업 과제 파편화 등 R&D 효율성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PBS 제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br>○ 출연(연) 연구자의 정년을 대학 교수와 동일하게 65세로 연장하는 등 생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br>○ 출연(연)의 인건비 및 경상비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br>○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연구소기업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보완 필요<br>○ 다수의 연구기관 후임 원장 임명 지연이 발송하고 있는바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br>○ 한미일 공동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연구 역량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 <미래인재정책> | ○ 과학고 및 영재학교 학생의 의대 진학으로 인하여 4대 과학기술원 정원 미달 등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 수립 필요<br>○ 여성과학기술인의 출산·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인력풀 시스템 도입 등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br>○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2+1 제도로 개편한 이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br>○ 광주과학기술원 부지매입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상향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필요<br>○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제도 도입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br>○ 과학기술계의 관리직이나 책임연구원에 여성 비율이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br>○ 4대 과학기술원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화캠퍼스를 갖춘 대학도시 조성을 검토할 필요<br>○ 4대 과기원의 학생 수와 학생인건비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통계자료도 있으므로 관련하여 정확히 조사하고 실제 학생인건비가 감소한 부분을 확인하고 조치할 필요<br>○ 울산과학기술원의 인건비 지원 규모가 다른 과학기술원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개선할 필요<br>○ 4대 과기원 상임감사의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 필요<br>○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바이오 분야에 대하여 4대 과기원 교수의 정년을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해제하여 연구기반을 확대할 필요 |
| <과학기술정책> | ○ R&D 예산의 수도권 집중 심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에 적합한 전략산업 육성을 검토할 필요 |
| <성과평가정책> | ○ 부실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KISTI에서 구축하고 있는 건전학술활동지원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적극 검토할 필요<br>○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데이터 이관이 늘어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공고 과제 및 수행 과제 조회 검색 시간 더딤, 연동 불안정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닌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함<br>○ 과제를 선정받은 연구 책임자가 가족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바 관련 규정 및 관리 필요 |
| <정보통신정책> | ○ 디지털 포용정책에 있어 우정사업본부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br>○ 디지털배움터 확대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늘릴 필요<br>○ 국가도메인 기간 만료 후 악용 방지를 위하여 안내조치 등 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br>○ 중고거래 관련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공률이 저조하고, 소비자원 및 공정위에서 만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관련하여 공정위와 협의할 필요<br>○ 블록체인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br>○ 프랑스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AI 카페를 전국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br>○ 딥페이크 오남용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필요 |
| <인공지능기반 정책> |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관리 중인 자격시험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할 필요<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이 준비되는 대로 보고할 필요<br>○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이 해당 위원회에서 수립한 계획에 근거한 사업의 과제 책임연구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우려<br>○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사업은 2021년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중복지원 부적절 우려<br>○ 컴퓨팅인프라의 분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며, 컴퓨팅인프라 구축 및 활용에 있어 광주AI집적단지의 활용을 염두에 둘 필요<br>○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사업에서 부적절한 연구자에게 예산을 지원하였으므로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고할 필요<br>○ AI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음<br>○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생태계 기반을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br>○ AI 전문가들을 통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br>○ AI 분야 예산 투자를 늘릴 필요<br>○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에 집중할 필요<br>○ 미국 사례 검토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절차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 필요<br>○ AI 관련 공공·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br>○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있으므로 충분히 논의할 필요<br>○ 데이터센터의 필요성 및 안전성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조성하고 대국민 소통방안을 마련할 필요 |
| <소프트웨어정책> | ○ AI 분야 해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 <정보통신산업정책> | ○ 딥페이크 탐지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br>○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반도체 개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br>○ GPU 수급 등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시 글로벌 빅테크 협력을 위해 노력할 필요 |
| <정보보호네트 | ○ 공공부문 외국 클라우드 개방 관련 공공데이터 보호와 활용 대책을 마련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워크정책> | 하여 제출할 필요<br>○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br>○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필요<br>○ 모두투어 해킹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지 지연을 아는 순간부터 바로 규제할 수 있도록 협의할 필요<br>○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 관련 대책이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할 필요<br>○ 큐싱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보고할 필요<br>○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사무소 본원 이전을 검토할 필요<br>○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대가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사이버 전력 지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br>○ CSAP 등에 의한 과도한 보호가 국내 클라우드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필요 |
| <통신정책> | ○ 불범스팸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사업자를 관리하고 문자재판매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 필요<br>○ 키즈폰에 대한 불법 음란 스팸 발송 방지를 위해 통신3사가 키즈폰에 번호 부여시 미사용번호를 우선 배정할 필요<br>○ 5G 실제 속도가 정부 측정치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대한 확인 필요<br>○ 5G 요금제를 개편한 결과 발생한 LTE-5G 가격 역전을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금제는 가입 제한하는 등 LTE 요금제를 개선할 필요<br>○ KT의 데이터전송 속도 저하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노력 필요<br>○ KT의 고객정보 불법탈취 및 변조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통신사 관리·감독 필요<br>○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일부기기의 자동로밍 미차단 문제 개선 필요<br>○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수록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로밍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br>○ 선택약정 만료 무약정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 단통법 폐지 이후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 필요<br>○ 단통법 폐지 관련 선택약정할인에 한해 유보신고제를 통신3사로 확대하고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 부여 필요<br>○ 취약계층의 디지털접근권 강화를 위한 디지털바우처 제도 확대 필요<br>○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남용에 대한 대책 필요<br>○ 휴대폰깡을 이용한 범죄 및 불법광고에 대한 관리 필요<br>○ KT 르완다 4G망 구축 관련 독점권 취소 등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에서 기업이 안심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 필요<br>○ 보편적 역무 관련 불합리한 초고속 인터넷 설치비용 전가 문제 개선 필요<br>○ 보편적역무 제공의무자에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되도록 검토할 필요<br>○ 구글 망사용료 관련 구글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국회와 함께 노력할 것<br>○ 배달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 수수료 과다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이 크므로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br>○ 스푸핑, 공공 또는 사기업의 발신번호를 이용해 기만하는 문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부적절 메시지를 탐지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br>○ 발신번호 변작기의 적극적인 단속 조치를 위해 법안 발의 예정인 바, 정부의 적극적인 의견제출 협조 필요<br>○ 발신번호 거짓표시 건수에 대한 신고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필요<br>○ 알뜰폰 대포폰 문제와 이통3사 자회사들의 영향력 완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br>○ 알뜰폰 시장 확대를 위해 로밍 등 이용자 편의 서비스 의무 제공 필요<br>○ KB 알뜰폰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사항을 살펴볼 필요<br>○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가 인하 등 정부의 노력 필요<br>○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검토하고, 폰케어 보험 서비스 등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 필요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 KT 주요 요직에 검사출신 임명 등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과 현대차의 경영권 행사 우려에 대한 의혹 해소 필요<br>○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등극시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한 것은 법 개정사항임에 대한 검토 필요<br>○ 영화관람료 정산구조에 대한 문제점 검토 시 협조 필요<br>○ 공공와이파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데이터 기부 시스템 도입을 사업자와 논의해볼 필요 |
| <방송진흥정책> | ○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 전용 T-커머스를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br>○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이 심화되고 홈쇼핑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므로 홈쇼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br>○ IPTV에 입점해 있는 PP와 상생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br>○ 블랙필터 설치, 열악한 근로조건 등 HC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필요 |
| <전파정책> | ○ 4이동통신사 무산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와 과기부의 과실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취소와 관련하여 내부조사 후 보고 필요<br>○ 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 선정 경위 파악 필요<br>○ 해외에서 적합성평가 면제 전자기기를 구입한 후 1년이 되기 전 되파는 경우 처벌하고 있는 건수가 연간 300건 정도에 이르고 있으므로 유예기간에 대한 검토 및 관련 내용 홍보 필요<br>○ 전자파 유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 |

## 나. 방송통신위원회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ㅇ민생토론회 관련 수의계약 진행, 계약서 미작성 및 결과보고서를 잘못 작성한 것은 부적절함<br>ㅇ민생토론회 관련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는지<br>ㅇ이진숙 위원장은 직무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국정감사장에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함<br>ㅇ방통위 직무가 마비된 상태로 여러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함<br>ㅇ탄핵 사건으로 직무정지기간이 길어져서 7-8개월 동안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탄핵소추 동기가 되는 것은 문제임.<br>ㅇ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중인 상황에서 유튜브에 반복적으로 출연하고, 특정 정당 및 방송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음에 과도한 월급을 수령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 필요<br>ㅇ이진숙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에 극우 유투브 출연하여 발언한 것은 문제가 있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KOBACO 사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임명한 문제가 있음.<br>ㅇ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유투브에 나가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문제가 있음.<br>ㅇ이진숙위원장은 직무정지 중인데 불출석사유서를 방통위 직원이 대리로 제출한 것은 방통위를 사유화한 문제가 있고,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함.<br>ㅇ이진숙위원장이 최철호 증인을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둘 다 공언련에 속해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해충돌 문제 발생 여부 검토 필요.<br>ㅇ이진숙 증인,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방송의 공정성 등 인청 때 말했던 것처럼 공정한 업무수행을 했을 것인지<br>ㅇ이진숙 증인은 9월 24일에 민주당 좌파집단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였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는데, 위원장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인지시 감사담당관의 대응 필요<br>○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정치편향적인 유튜브 출연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사원 감사 요청 필요.<br>○ 이진숙 위원장의 보수 유튜브 출연이나 '보수의 여전사' 발언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6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br>○ 공무원 신분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지, 공개적으로 정치집단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명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닌지<br>○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위반에 대해 감사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방통위는 국민감사 및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에 그쳐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br>○이진숙위원장은 23년 7월호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공언련, 자유언론포럼 등 일부 조직에 소속되어있다고 하여 2022년 7월 31일 이후 언론단체 활동을 안했다는 것은 거짓임.<br>○ 이진숙 위원장의 공언련 활동기간을 요청했으나, 가입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사퇴시점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제출한바, 이해충돌의무와 관련해 이를 확인할 필요<br>○이진숙 위원장은 무임금 무노동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퇴할 필요가 있고, 조성은 차장은 방송장악을 위한 실무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는 문제가 있음.<br>○방통위원장 직무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방통위 존립에 위기가 올 것이므로 방통위 정상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br>○ 직무대행의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나 발언에 대한 주의<br>○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로펌이 어디인지.<br>○ 위원장 탄핵, 국회 청문회 진행, 감사요구안 통과 등에 대한 직무대행의 개인발언이 정치적 발언에 해당하며 부적절하다는 점 질타<br>○경찰청, 검찰청, 감사원 등에서 파견을 받아 방통위를 특별수사본부로 만든 것이 이 정권의 권력 운용 방식으로, 방통위의 사정기관 진주를 방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곧 발의할 것임.<br>ㅇ방통위가 파견 받아 감사기구 구성하는 데에 1주일 걸렸다는 것은 상층부의 재가가 있었기 때문임.<br>ㅇ사무처장은 방통위에 와서 첫 번째로 사정기관 파견 요청하여 일주일만에 사정기관에서 파견을 받았는데 이는 문제가 있고, 파견받은 사람을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낸 것도 문제가 있음.<br>ㅇ사무처장이 방통위로 온 후로 19인을 방통위로 파견받았는데, 현재 방통위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담당관실에 8명을 파견은 불필요하므로 돌려보낼 필요<br>ㅇ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인력의 파견은 방통위의 수사기관화를 초래하고 인혁처 승인도 없는바, 파견직원의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필요.<br>ㅇ방통위는 2018년 감사에서 EBS 이사 정당 경력을 본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지적받았는데,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면서도 당적조회를 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br>ㅇ 2018년 양승동 사장, 2021년 김의철 사장 선임 시 시민참여평가제도를 시행했으나, 이번에는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br>ㅇ방통위 내 감사기구를 통해 방심위 정연주 이사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조한규 이사장, KOBACO 이백만 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감사를 한 문제가 있음.<br>ㅇ정연주, 이광복이사를 해촉하고, 황성욱 이사는 방심위원장 직무대행하다가 KBS이사된 것은 부당하지 않은지<br>ㅇ 공영방송 이사진 선정 과정에서 방통위 회의운영규칙 상 절차 위배가 있었음<br>ㅇ2012년 MBC 파업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진숙위원장의 입장은 불법인지 합법인지<br>ㅇ MBC PD수첩 과징금 처분의 법원 취소 판결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br>ㅇ 법원 판결에 따라 언론노조 KBS지부가 사장선임 중단요구 등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판결에 따른 불필요한 소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입증하고 방통위를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KBS 사장선임절차에 대한 방통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br>○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문진 및 KBS 이사선임 의결, 이에 연달아 이루어진 KBS 사장 선임 등 위법한 방통위 의결에 대한 원상회복 필요<br>○ KBS이사 선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는데 정부가 행정소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사례가 없음<br>○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판부의 기각 후 즉시 항고는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 임명을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닌지<br>○방문진 이사 소송 관련 항고한 이유는 1심 판단에 어떤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인지, 의사정족수는 현행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 2심이 기각되면 방문진 이사에 대한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br>○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지금까지 집행된 소송비용, 예산 전용 문제, 예산집행 없이 법무법인들과 외상으로 계약 체결한 문제 등 질의<br>○ 방통위와 방송사 사이 소송이 증가한 원인은 방통위와 방심위의 불법적 방송장악 때문으로, 이로 인해 소송비가 증가하였고, 소송비 예산을 편법 전용한 문제가 있음<br>○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린 의결에 대해 법원의 취소판결·집행정지 등이 이루어지고 판결문에서 위법성을 지적하는데 이에 대해 인정하는지.<br>○ 서울행정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판단 오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br>○ 사법부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색깔론 등 법원 불신 조장 발언은 부적절하며 이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할 필요.<br>○ 미·영·독·프·일 등은 언론 윤리 영역에 있는 공익적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를 자율심의에 맡기며, 이는 국가기관이 방송 내용을 규제할 경우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에 동의하는지<br>○ 2012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볼 때 방심위, 방통위의 정파적 심의, 과잉심의, 자의적 심의 등 파행운영은 방송심의 및 방통위 규제 기능에 헌법적인 정당성 위기를 가져올 우려<br>○ 방심위나 방통위가 미국의 FCC를 모델로 했다고 하지만, FCC는 실질적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으로 방통위와 방심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해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됨을 우려<br>○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닌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다고 방송사를 제재하는 것은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한 사안<br>○ 윤석열 정부의 6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지 못하는 등 민생 현안을 방치하고, 공영방송 장악에 집중하는 점 유감 표명<br>○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업추비 유용 등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대로 감사하고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관련자료 제출할 필요<br>○ 방심위 직원 149명이 방심위 위원장을 고발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감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면 방심위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지 않는지<br>○ 방심위 내부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 |
| <방송정책> | ○방통위가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기한 내 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해적방송이 될 수 있고, 방송 촬영 중에 인적, 물적 사고가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br>○SM 그룹의 울산방송 소유는 방송법 위반이며 방통위의 시정명령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br>○ SM그룹의 인수 후 UBC울산방송의 서울 수유리 부동산 매입, SM그룹 계열사로의 자금대여 등 유보금 투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 우려<br>○ 방송법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음에도 방통위는 4차례 시정명령만 할 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 지적<br>○ 비용절감 차원에서 사전제작된 AI뉴스를 지역 민영방송에서 도입하는 상황인데, 생방송 주말뉴스가 없어지면서 지역화재사건 등 신속한 현장취재 보도가 어려워지는 점 우려<br>○UBC 울산방송의 사내유보금이 바닥나는 상황이고 주말뉴스를 폐지하는 등 운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책 마련 필요<br>○ 지역민방을 비롯한 민방 소유구조 전반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필요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ㅇ전국 철도 터널의 98%가 FM라디오 수신이 불량한 등 재난방송 수신환경에 미흡한데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41.5% 삭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br>ㅇ DMB 재난방송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나 방송국 등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낮은 이용률(2%)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br>ㅇ DMB 재난방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br>ㅇ 경인방송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주요 주주인 서울미래포럼과 서울앵커호텔이 조동성 회장의 가족회사들 아닌지<br>ㅇ 경인방송 인수와 관련된 이면계약서의 존재를 파악했음에도 경인방송에 대한 재허가를 내준 것은 무책임함<br>ㅇ경인방송 주주간 이면계약서 문제가 있음에도 24년 1월에 재허가를 내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br>ㅇ아리랑 TV와 국악방송에 방발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소관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br>ㅇ국악방송은 국악과 관련 없는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가 방영권 구매 전체 금액의 70% 이상으로, 국악방송 보조금 수익의 관리가 부실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br>ㅇ 공동체 라디오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으로 사업 활성화 필요<br>ㅇ 미디어 교육 중 특히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관한 대책 마련 필요<br>ㅇ OTT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
| <이용자정책> | ㅇ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강제 정책과 높은 수수료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추징이 시급하고 미국법상 청구권 행사도 고려할 필요<br>ㅇ인앱결제할 때 애플에서는 부가세포함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여 수수료를 33% 가져가는 등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br>ㅇ아이폰의 긴급 SOS 서비스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지 않는 문제, 애플인터리전스 한국어 미지원 문제, 아이폰 단말기의 5G 전파 수신장애 문제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등 한국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반면에 아이폰의 가격은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 문제가 있음.<br>○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 CP가 구글인데, 구글이 국내기업인 네이버, 카카오와 달리 망 이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br>○ KT 스카이라이프의 KT 망사용료 절감이 낙하산인사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한 조사 필요<br>○구글은 망사용료 지불하는지,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br>○ 구글코리아가 법인세를 155억원만 납부했는데, 국내 이용자의 매출이 해외 매출로 산정되거나 미국 본사로 이전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매출이 낮게 잡혀 조세회피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br>○본사와 달리 구글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수에 불과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명목으로 공시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있는데, 매출 대비 법인세율이 저조한 문제 등에 대해 국회에서 조사할 필요<br>○구글은 2023년 추정 매출액이 12조 1천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매출액은 353억원에 불과하며, 납부법인세는 115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사실상 탈세아닌지<br>○구글은 인앱결제 강제금지에 불구하고 개발자들을 착취중인데, 과징금 부과하면 납부할 것인지<br>○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행태를 볼 때 국내 토종기업들이 역차별 당하는 문제가 있어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br>○ OTA(Online Travel Agency)의 정크 피(junk fee) 등 소비자에게 부과되지만 명시되지 않는 수수료 문제에 대한 관심 필요.<br>○불법 사금융업자가 채무자를 협박하고 추심하면서 온라인 상에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br>○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경로의 90%가 네이버 유입으로, 유사 키워드 검색시 서민금융진흥원 링크가 포털에 나타나도록 협의하였는데,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노출 빈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해 조치할 필요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ㅇ이통사에 대한 방통위와 공정위의 중복 규제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업무조정할 필요<br>ㅇ이통3사가 방통위의 안내에 따라 단통법 규정을 지키니 공정위가 담합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방통위가 전문성을 가진 규제집단으로서의 공정위와의 조정책을 마련할 필요<br>ㅇ이통3사가 2년 약정한 소비자의 위약금을 1년 약정 소비자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등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치 필요<br>ㅇ 단통법 시행령이 졸속개정되어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모법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br>ㅇ 단말기 전환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할 책임과 책무 필요.<br>ㅇ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망 도매대가, 전파사용료 인하 등 지원정책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br>ㅇ휴대폰 판매 관련 허위과장광고 등 온라인 성지점의 월 평균 신고건수가 작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이 방통위가 모니터링을 중단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br>ㅇ 소위 온라인 성지점에 대한 과장광고에 대한 피해가 지속되나 모니터링이 중단된 상황으로, 대책 마련과 모니터링 강화 필요.<br>ㅇ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쿠팡에 양호 등급을 주었는데, 쿠팡의 블랙컨슈머 선정 시 이용자 사전고지 및 소명기회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br>ㅇ당근마켓에서 미성년 구인 정보가 유통되면서 범죄 대상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민형사 사건 관련 특정 플랫폼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관리할 필요<br>ㅇ 당근마켓이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화면서 범죄에 노출되거나 종교 포교에 활용되는 등 미성년자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 이를 검토할 필요<br>ㅇ추석연휴 당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27명에 이르는데,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고, 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시정조치 필요<br>ㅇ딥페이크는 무료로 몇 십초 안에 사람 얼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장히 위험한데, 방통위의 딥페이크 정책은 사후약방문이고 온라인 피해 365센터 관련 25년 예산안이 삭감된 문제가 있음.<br>○ 딥페이크 관련 문제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디지털성범죄 정보 공공 DNA DB사업에 대한 투입예산이 얼마인지.<br>○디지털성범죄 정보 공공 DNA DB 사업의 성과자료 제출 책임을 방통위와 방심위가 서로 전가하고 있는바, 협의 후 성과 자료제출 필요.<br>○마약 관련 인강 등 컨텐츠가 유통되고 있는데, 방통위가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br>○텔레그램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을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고, 쯔양 사건 등에 대해서 국내대리인과 접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함<br>○청소년들의 SNS 중독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연구 결과가 있고, 영, 프, 미국CA 등은 SNS 사용 제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는 보호조치가 없으므로 연구용역 이후 대책 마련 필요<br>○ 네이버가 독점적인 뉴스 유통 지배력을 바탕으로 언론사의 수익기반을 잠식하고 있는데, 언론사 지배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평위를 즉각 해체하고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br>○네이버는 언론사 기사를 AI가 무단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구 약관 조항을 활용해서 기사 저작권을 AI 학습 목적으로 침해하였는데, 이를 중단할 필요<br>○네이버는 제평위 재개에 앞서 아웃링크 선택제 도입, 저작권 침해 배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br>○네이버는 지방지는 84개 뉴스콘텐츠 제휴사 중 12개에 불과하는 등 뉴스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제평위 재가동은 언제인지<br>○네이버에서 조직적 댓글조작 사이트 관리할 필요<br>○네이버 치지직의 영상 후원 기능 관련하여 원저작자와 스트리머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br>○네이버가 운영하는 치지직에는 게임·공부방송이라고 지칭하면서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특정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영상들을 비로그인 상태에서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도 쉽게 볼 수 있음. 선정성 기준·모니터링 강화 등 조치 필요<br>ㅇ네이버는 중장기적으로 뉴스 랭킹 알고리즘을 오픈소스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br>ㅇ방통위에서 1년 전부터 네이버 투명성 검증 조사 중인데 그 목표가 여당을 지지하는 언론매체를 뉴스 콘텐츠 제휴매체로 선정하려는 것으로 보임<br>ㅇ제평위에 대하여 지역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을 필요<br>ㅇ네이버는 전체 뉴스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질 필요<br>ㅇ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가 여전히 네이버 뉴스 CP사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임.<br>ㅇ 뉴스타파는 네이버 CP사를 대상으로한 제평위 평가 결과 콘텐츠 제휴 합격 매체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제휴 매체 벌점 부여를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CP사로 선정이 된 것임.<br>ㅇ유튜브 광고를 시청하면서 유료 데이터 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필요<br>ㅇ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한국에서 유독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데, 저렴한 학생요금제 및 라이트 요금제 출시할 필요<br>ㅇ주요 OTT서비스에 대한 국내요금 인상은 우리나라에 대한 차별 아닌지 조사가 필요<br>ㅇ넷플릭스 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이 본사에 비해 매우 저조한 문제가 있고, 캐나다나 프랑스는 넷플릭스가 OTT 관련 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br>ㅇ구글은 음성 정보를 수집해 마케팅한다는 액티브 리스닝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 필요<br>ㅇ네이버, 구글과 같은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문제가 심각하고,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ㅇ애플, 메타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br>ㅇ최근 한중 경쟁산업분야에서 중국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댓글을 게재한 정황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br>ㅇ 메타는 유명인 사칭 등 SNS 허위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지하고 있는지, 메타의 인증마크가 사칭 계정에도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개선될 필요<br>ㅇ구글은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방통위에서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응이 필요<br>ㅇ청소년들이 해외 쇼핑몰의 혐오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방통위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br>ㅇ팬트리는 소속 크리에이터가 사실상 불법 성인물을 판매하는 등 팬트리의 운영 정책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데, 팬트리의 수익을 위해서 방조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방통위는 불법 성인물 유통을 집중 단속한 결과 등을 보고할 필요<br>ㅇ 유튜브 계정을 통해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음란성 콘텐츠에 대한 운영기준이 없는지,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br>ㅇ 메타는 음란성 콘텐츠에 대한 운영기준 등 해결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br>ㅇ 사이버 렉카, 가짜뉴스 문제 등을 막는 방법으로 이로 인한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br>ㅇ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범죄 등과 관련하여 원천적으로 경제적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몰수하는 대책이 필요<br>ㅇ유튜브 범죄 관련하여 쯔양 사건 등을 보면 빠른 조치가 가능함에도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br>ㅇ 경찰서, 소방당국이 요청하는 GPS 정보조차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br>ㅇ 본인확인 기관이 늘어나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가능성과 불안감이 높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아지므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br>○ 통일TV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심의 요청 건에 대해 즉각 심의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br>○ 중국 사이트에서 한국인 계정정보가 거래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br>○ 지상파 및 종편방송과 홈쇼핑 연계편성 문제가 심각한 바 관련 내용을 검토할 필요<br>○불법스팸문자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 및 대책이 미흡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br>○불법스팸문자가 23년에 전년대비 20배 증가하였고, 대량문자 전송사업인 증제를 시행했으나 90%가 미신청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주요 불법 스팸 발송 재판매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br>○불법 스팸 문자에 대해 차단의무를 강화하는 등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br>○ 불법스팸 폭증하고 있고 국회는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였지만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개선 필요<br>○ 방통위는 국내대리인 제도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메타 등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전무함.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br>○ 구글지도의 국가보안시설 표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방송기반정책> | ○ KBS '학교 2021' 드라마 제작 관련 외주제작사에 대한 KBS의 갑질의혹이나 KBS의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위반 등에 대해 조사 필요<br>○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의 위헌판결시 지방방송사 운영 어려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br>○ SBS M&C 출범 이후 SBS와 지역민방의 광고배분비율이 75:25에서 80:20로 변경되어 지역민방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바, 개선 필요<br>○ 종편3사가 새벽에 재난방송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는 종편 방송평가시 단순히 총량기준의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개선이 필요 |
| <YTN 관련> | ○YTN은 당초 공기업이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공공성·공익성 차원에서 의무송출 특혜를 받았는데, YTN 최대주주가 유진ENT로 변경되었으므로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의무송출 제도개선 합의체를 구성하여 특혜폐지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br>○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각각 산업부, 농림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에서는 YTN 출자를 존치하겠다고 하여, 당초 대주주들이 팔 의사가 없었는데 YTN 사영화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여 팔도록 한 것임.<br>○ YTN이 민영화 되었더라고 기본적인 공익성과 공영성을 추구해야할 것인데, 민영화되면서 이윤 추구에 가깝게 될 것 같은데 구성원들의 생각은 어떤지<br>○ 김백사장 취임 이후 라디오 진행자 교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보는지<br>○ 방통위원 2명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의결한 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함.<br>○YTN 민영화 이슈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정부 주식 매각은 YTN의 정치적 독립을 이야기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br>○YTN은 티메프 상품권사 미정산 금액 7위 업체고,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도 안해서 YTN 머니콘 소비자 피해가 커졌는데, 이는 YTN 대주주가 유진이 되면서 이러한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br>○YTN매각은 통상적인 공공기관 민영화 절차와 다르게 관련 부처 등의 협의 없이 급하게 진행되었음.<br>○김어준과 같은 분들이 공영방송에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 언론노조에서 비판한 적 없어 공정방송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br>○ 김백 사장과 배석규 전 사장은 YTN 암흑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이전과 달리 YTN의 보도공정성이 의심됨.<br>○산업부가 한전KDN에 사실상 YTN 매각을 지시했는데, 이례적 매각 절차를 누가 어떤 의도로 추진했는지를 방송 최대주주 변경 심사에서 심사하였어야 하고, 변경심사가 2주만에 이루어진 것은 졸속심사임.<br>○청취율 1위였던 박지훈 진행자를 하루 전날 하차시킨 것은 이례적이고, 새로 온 진행자는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됨.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ㅇ남산타워를 국가중요시설 나급으로 지정한 이유를 알고 있는지, 남산타워가 YTN 소유인데 민간기업인 유진그룹이 YTN을 소유하게 되면 국가의 중요자산인 남산타워가 민간에 넘어가는데 이후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br>ㅇ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으면 한명만 탄핵결정에 이견이 있어도 결정이 무기한 미뤄질 수 있음.<br>ㅇ방통위 업무가 마비된 상태가 지속되면 지상파 방송 재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지상파 방송 150여개가 무면허 상태가 될 우려가 있음.<br>ㅇ 한전 KDN이 YTN 주식 매각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매각을 통해 투자금과 이자를 회수했는지,<br>ㅇYTN이 어떻게 지켜진 보도전문 채널인지, YTN 재승인 부과조건인 임명동의제를 최다출자자가 된 유진그룹에서 지키지 않고 있음.<br>ㅇ삼성증권이 하이브 관련 대략 매집이 결정된 당일에 주관사 자격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전 KDN은 정부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YTN 주식 매각을 했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팔라고 한 것인지, NH투자증권이 마사회 지분 매각주관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br>ㅇ 한전 KDN 노조는 한전 KDN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악영향을 주겠다는 등 정부 여당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고, 김장현 사장이 여권 인사들로부터 YTN 매각하라는 전화를 자주 받는다는 주장을 하였음.<br>ㅇ YTN 사영화 과정은 여당 위원들과 산업부 등 정부기관이 총 동원된 외압의 결과임.<br>ㅇ 2인 체제로 인앱 결제 처리와 방송 재허가 처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공영방송사 이사선임 건은 하였음.<br>ㅇ방통위 직무대행의 입장에서 YTN 민영화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함.<br>ㅇ마사회가 자발적으로 입찰한 것인지, NH투자증권에 유진그룹이 먼저 자문요청을 한 것이 아닌지<br>ㅇ방통위는 11월 29일 변경승인을 보류하였으나, 2월 7일에는 승인을 하였는데, 11월에 보류했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ㅇ한전KDN은 2022년 8월 16일 제출한 입장과 달리 정부의 입장을 따르기 위해서 입장을 바꾼 걸로 보이고, 마사회는 2022년 농해수위 국정감사 이후 회사의 정책적 판단 무시하고 정부 입장을 따른 걸로 보임.<br>ㅇ삼일회계법인은 단독매각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다가 한국마사회에 합쳐서 통매각을 결정한 것은 특정기업에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 보임.<br>ㅇ한국마사회와 공동 통매각 추진이 한전 KDN에 이익극대화를 가져오는지 효율적매각이 KDN을 위한 것인지, 정부가 한전 KDN을 압박하여 YTN을 민영화한 것임.<br>ㅇ 마사노보는 농식품부의 외압에 의해 마사회가 YTN 지분을 팔게 되었다고 하였음.<br>ㅇ YTN이 과거 편성독립권, 편집독립권이 어느정도 보장됐던 때에 비해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가 나눈 카톡에 대해 적은 비중으로 보도하는 것 같음.<br>ㅇ보도PP 의무송출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무송출 특혜 폐지를 논의 할 필요<br>ㅇ삼일, 안진회계법인이 당초에 한전 KDN 지분 단독매각 의견을 제시하였음.<br>ㅇ유진이 YTN을 인수할 때 당초와 달리 사추위를 폐지하는 등 YTN 민영화의 본질은 정권의 방송장악이라고 생각함.<br>ㅇ11월 심사위원회에서 보류하면서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등을 검토하라고 하였는데 이후 사장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사적인 것이 훨씬 강화되었음에도 2월에 승인이 됨.<br>ㅇ한전 KDN과 마사회를 통매각하면 지분이 30.95%로 방송법상 30%를 초과하여 언론사가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데, 의도적으로 통매각한 것임.<br>ㅇ이명박정권의 불법사찰조직을 운영한 배석규씨를 사외이사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함.<br>ㅇ유진그룹에서 YTN을 인수할 때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잘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방통위에서 이에 대해 점검할 필요<br>ㅇ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국감 불출석 사유로 호주 ABC 방송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방문을 제시하는데, YTN 경영에 관여할 자격이 없지 않은지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유진이엔티 이사회 구성원도 아니고 YTN 이사회 구성원도 아닌데 불출석 사유를 YTN 관련된 일로 제시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는지<br>○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호주 출장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필요<br>○ YTN이 상품권 사업으로 인한 손실, 피해자 발생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방송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등 민영화 폐해가 우려 |
| <TBS 관련> |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게 100%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가짜뉴스를 하였는데, TBS는 김어준에게 총 23억원 정도를 지급한 문제가 있음.<br>○TBS가 노영방송화된 문제가 있음.<br>○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서울시가 TBS를 폐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음.<br>○TBS는 전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필두로 전형적인 편향 방송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TBS가 민간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위원장 탄핵으로 기능이 마비된 상태임.<br>○서울시의회가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재정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하고, TBS를 증인으로 부른 것은 서울시 자체 행정권한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행위임.<br>○TBS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서울시에서 유예기간 연장 등 TBS 정상화 노력이 있었는데, TBS가 편성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이 맞는지, 그럼에도 재원을 과도하게 서울시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br>○TBS를 서울시의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독립적인 기관으로 발전 방향을 잡은 것이고, 뉴스공장의 보도 문제로 TBS 존립 문제를 논하는 것은 소뿔을 자르려다 소를 잡는 격임.<br>○오세훈 서울시장은 TBS 지원을 줄이면서 폐국을 추진하고, 민영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임.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ㅇ폐국을 맞게된 TBS의 역사와 방송계에 기여한 것들, 그리고 현재 심경을 말해주길 바람.<br>ㅇ비영리법인 TBS를 공익법인으로 변경하여 민간기업이 기부금 명목으로 TBS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꼼수 민영화이고, 서울시와 방통위가 책임을 져야 함.<br>ㅇ TBS대표이사 직무대행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거 아닌지<br>ㅇ언론 엄청난 질서의 후퇴기, 혼란기에서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의 방향은 무엇인지, 방송통신정책총괄권자로서 정책 결정권자로 갈등의 이해와 중재의 과정을 거쳐야하는거 아닌지<br>ㅇTBS 정관변경이 통상적으로 과장 전결 사항이었는데, 이번에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음.<br>ㅇ2020년에 TBS가 출연기관이 되었을 때 방통위가 재원 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었는데, 서울시가 재원을 끊고 출연기관 지정 해제한 것에 대해 방통위가 상업광고 허용을 검토할 필요<br>ㅇTBS의 2차 정관 변경은 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민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부영이 200억원을 기부하여 사실상 대주주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우려됨<br>ㅇ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에 대해 방통위가 행안부와 협의하였는지<br>ㅇTBS가 폐국 위기에 처해 직원들이 월급을 못받고 생계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br>ㅇ방통위가 2019년에 TBS의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시 재정적 능력을 중점 심사하였고, 서울시가 별도 서약서를 통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였는데 공적 약속을 어긴 것임.<br>ㅇ서울시가 2024년 5월까지 미디어재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가 6월에 갑자기 폐지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TBS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닌지<br>ㅇ서울시가 21년 이후 TBS의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재정적 독립하라는 취지라고 하였는데, TBS는 70%를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상업광고를 할 수 없어 재정을 독립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구조이고, 이는 TBS를 길들이겠다는 취지임.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 |
| | ㅇTBS 2차 정관 변경 역시 1차와 같이 방통위의 의결사항으로 보임.<br>ㅇ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경쟁력 최강 프로그램으로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봐야함.<br>ㅇ TBS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관련해 회신기한을 연장하고 법률자문을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지배구조 변경과 연결되는 사안 아닌지<br>ㅇ TBS 정관 변경과 관련해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바 신중히 검토할 필요 |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합리화를 위한 선제적인 규제 방안 마련할 필요<br>○ 12월 27일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의 장관급 행사에서 총리나 대통령급 행사로의 격상 필요<br>○ 원자력 분야 전략물자 대북 수출 통제 시스템 관련 원안위 계획, 관련 부처 간 협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수출 통제 역할 강화 방안 마련할 필요<br>○ 감액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해수 모니터링(시료 채취, 분석, 운영 등) 예산 증액 필요<br>○ 원전 시설에 대한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군과 관련한 대테러 또는 특수전 대비 태세와 충분한 훈련 필요<br>○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육성 및 확보 계획을 통한 충분한 인력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 불식할 필요<br>○ 원전 주변 불법 드론 탐지에서 후속조치까지의 체계가 반경별로 소관이 다르고 비효율적이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br>○ 제논탐지장비(젬스) 구축 국산화 연구부정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자체 검증 연구윤리 조사위원회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감사원 감사 요청 고려 필요<br>○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을 위해서 미국 NOAA 등과 해수부 포함 범정부 TF를 통해 논의 필요<br>○ 후쿠시마 오염수 포털 한국어서비스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일본어서비스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br>○ 지진 대비 내진설계 등 원전 안전 관련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필요<br>○ SMR 상용화를 위한 통합 인허가 검토 등 철저한 안전 규제 기준 마련 필요 |
| <안전정책> | ○ 신고리 원전 3·4호기(새울 원전 1·2호기) 등에 설치된 터빈 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전원 공급 방식이 건설허가 당시 비상디젤에서 운영허가 시 축전지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안전성 확인 필요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 중국 핵잠수함 침몰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해수에서 방사성물질의 철저한 관리 필요<br>○ 월성원전 4호기 냉각수 누출 사건 관련 분석장비 정밀도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신중하게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 허용 필요<br>○ 원전 계속운전 허가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동일 노형 반복인데도 심사기간이 길거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어려움으로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방사선방재> |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 관련하여 삼성전자 등 방사선발생장치 신고기관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등 안전점검 전수 조사 및 조사 결과 보고 필요<br>○ 2019년 삼성전자 사업장 방사선 안전관리 점검 부실 의혹 지적<br>○ 항공기 승무원 등 우주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 직업군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br>○ 방사성물질 이리듐 192가 서울 방배동 대한검사기술에 방치된 사례가 있었는데, 철저한 관리 필요<br>○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시 원안위에 의무 보고 기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 필요<br>○ 생활방사선법 상 결함가공제품에 대해 제조업자에게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계획을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소비자가 적극 요청하여 수거될 수 있도록 홍보 노력 필요<br>○ 활어차 해수 방사능 분석 횟수와 분석 핵종 확대 필요<br>○ 라돈 측정기 대여사업 관련 제품에 대한 측정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측정도 가능하도록 확대 필요 |

## 라. 우주항공청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우주항공 분야는 미래 국가 생존전략, 국가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요하므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
| <우주항공정책> | ○ 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이 부족하므로 그 규모를 확대할 필요<br>○ 국가우주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등 우주항공 정책의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br>○ 우주인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 |
| <우주수송부문>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항우연 직원의 기술 유출 시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br>○ 우주항공청의 재사용발사체 관련 기술 개발 계획에 대하여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개선하고 재사용발사체 발사를 위한 발사장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br>○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하여 성공적인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분배에 관하여 보다 진취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 |

## 마. 소속기관

### 1) 우정사업본부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ESG투자를 추구하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점검하고 문제 소지가 있다면 시정 방안을 강구 할 필요<br>○ 고령층에게는 우체국 서비스가 중요한데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우체국에서도 우편이나 택배 외에 금융서비스도 제공할 필요<br>○ 1개 읍·면에 1개 우체국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행정당국·경찰·보건소 등과 협조하여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노력 필요<br>○ 안전장치가 미흡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 운행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 필요<br>○ 우체국은 현재 대출 업무를 못하는데, 시군 지역·농어촌 등 전국 서민들을 대상으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하는 포용금융 역할을 할 필요<br>○ 우체국보험 가입한도가 30년 가까이 동결되어 있는데 과기부와 협의하여 증액 할 필요 |

### 2) 국립전파연구원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전파연구원의 전파연구(R&D) 사업은 법정 연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전액 삭감된 이후 2025년에 비R&D 사업으로 변경되어 예산이 배정되었으므로, 2024년 전액 삭감 사유 및 변경 조치에 대한 검토 필요 |

### 3) 국립중앙과학관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 |

### 4) 국립과천과학관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 전시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우므로 재검토할 필요 |

## 바. 위원회 선정 공공기관

### 1) 한국연구재단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국비가 지원되는 연구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와 연구비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br>○ 연구책임자가 가족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키는 경우에 대하여 충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br>○ 과제당 기획평가 예산이 38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저조하므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할 필요 |

### 2) (기초과학연구원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교육부 산하 연구원과 협력하여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 3) 한국원자력의학원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산하 원자력병원의 장비와 건물 등이 노후화되어 제대로된 치료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4)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아휴직 지원 등에 대하여 진취적으로 검토할 필요<br>○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을 막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 |

###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초거대 AI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사업은 2021년도 사업인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개발과 사업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여 중복 지원이므로 과제 선정을 취소할 필요<br>○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핵심사업 아이템 설계, 앵커기업 유치, 제조기업 데이터 강화 및 범정부적 추진 필요 |

6)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국가도메인 기간 만료 후 악용 방지를 위하여 안내조치 등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br>○ 해외직구 IP카메라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쇼핑 플랫폼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 대한 보안안내 등 대책 마련 필요<br>○ 중국산 저가 와이파이 공유기 해킹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외직구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br>○ ISMS-P, CSAP, 신규 도입 예정인 MLS 등 다양한 규제로 산업계 혼란 우려가 있으므로 행안부 및 국정원과 함께 정책 방향성을 논의할 필요<br>○ 중소기업 사이버침해 대응 예산이 삭감되었고, 대응인력도 충원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br>○ 클라우드산업 발전과 보안의 균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br>○ 중국 사이트에서 한국인 계정정보가 거래되고 있으므로 관련 시스템을 점검·구축하여 보고할 필요<br>○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고, 북한에 의한 공공기관 해킹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계획을 보고할 필요<br>○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가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br>○ 서울 잔류 인원을 지방 본사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할 필요<br>○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 해결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논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의하여 관계법령 등을 정비할 필요<br>○ 인터넷안전진흥원, 인터넷보안진흥원 등 실제 업무의 성격에 맞게 기관 명칭 변경을 검토할 필요<br>○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 시 신고 및 대응시스템을 완비하고 홍보할 필요<br>○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관리조치를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br>○ 중고거래 관련 분쟁조정에 소비자원 및 공정위에서 만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br>○ 모두투어에서 해킹 이후 72시간 이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조사할 필요<br>○ 변조된 QR코드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br>○ 불법 스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및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필요 |

### 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전자파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결과 홍보 필요<br>○ 사업평가를 서울이 아닌 지방이전 지역에서 할 필요<br>○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K-컬쳐 확산 등 예산 확보 필요 |

### 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디지털배움터 예산 삭감 및 경남지역 센터 부재 관련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 공공앱 UI·UX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프론트엔드 유닛 테스트 등 사용성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br>○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부정 사업비를 환수할 필요<br>○ 노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개선을 위해 디지털배움터와 관련하여 농·산촌 지역과 직접 접촉할 필요<br>○ AI 관련 연구개발, 인재육성, 인프라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대폭 지원할 필요<br>○ 공문서가 대부분 아래한글로 제작되어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선할 필요<br>○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실적이 저조하므로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br>○ 디지털 포용산업 관련 장기적인 지원과 수요 창출을 위한 시장 분석 및 기술 수준 등 조사·분석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필요 |

### 9)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br>○ 관리 중인 자격시험에서 다수의 오류가 있어 데이터산업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 우려<br>○ 반려동물 데이터 표준화 등 국가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 기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 |

### 1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사장 지원 당시 정무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이나 국회 여러 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보임.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여야 당대표에 대해 막말을 한 전적이 있으면서 국회와 어떻게 협력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므로,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할 필요<br>○수익구조가 방송광고의 총량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방송규제 완화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br>○ 코바코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로 광고분야 전문가를 사장으로 임명해야 했는데, 민영삼사장 지원서에 관련 분야 경력, 연구나 과제 수행, 주요업적 등 경험 없는 사람이 임명된 문제가 있음.<br>○ 코바코 사장으로서 전문성, 도덕성, 직무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정치적으로 임명된 것 아닌지 |

## 11) 시청자미디어재단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최철호 증인은 02년에 검사사칭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이후 반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임.<br>○이진숙위원장이 최철호 증인을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둘 다 공언련에 속해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이해충돌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음.<br>○이사장은 선방위에 있을 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적이 있고, 대통령 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절하기 민망해서 받았다고 발언한 문제가 있음.<br>○감사담당관이 이사장 관련 권익위 이첩 내용 접수받았는지, 지금도 김건희 씨를 평범한 주부라고 생각하는지<br>○MBC가 기자들이 뽑은 신뢰하는 언론사 1위인데, 이사장은 MBC를 편향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퇴해야된다고 생각함.<br>○이사장은 지난 2월에 공언련 대표직 그만두고, 12월에 선방위원됐고 이번 총선 때 선거방송 심의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 채용되기 전 2년 재직한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보기때문에. 권익위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방심위로 이첩했음.<br>○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 교육을 하는 곳인데 지역 센터에서 대통령 부인이 평범한 주부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것 아닌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 이사장으로서 적임자가 아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때문에 자격이 없음 |

### 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제논 탐지장비(젬스) 구축 연구개발과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로 인한 해당 사업의 표류 가능성 지적 |

### 13)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원자력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 등을 배제하고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이사장으로서의 역할 다할 필요<b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제논 탐지장비 구축 연구개발과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br>○ 안전재단이 실시한 방사선 이용 신고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미신고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한 경우가 22%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필요 |

### 14) 한국수력원자력㈜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체코 원전 수출 수주 성공을 통한 국익 창출을 위해 수익성 부족에 대한 검토, 지적재산권 소송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치밀한 협상 전략 수립 필요<br>○ 에너지혁신성장펀드의 원전 분야에 투자하는 주목적 투자 비율을 상향하도록 설계 변경 필요<br>○ 원자력 시설의 출입, 출입증 관리 및 주변의 드론 탐지를 철저히 할 필요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 원전 시공 관련 협력업체 도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 필요<br>○ 원전 건설·운영 관련 다양한 홍보 자료를 통한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br>○ 원전 해체 산업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 필요<br>○ 한수원 협력회사 해킹으로 기술자료(민감자료)가 유출되는 등 보안이 소홀함을 지적<br>○ 원전 주변 불법 드론 탐지에서 후속조치까지의 체계가 반경별로 소관이 다르고 비효율적임을 지적<br>○ 원전 주변 불법 드론 탐지 및 무력화를 위해 장비 설치에 40억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상태로 뚫리고 있으므로 보안 사각지대 등의 점검 필요<br>○ 양수발전 우선사업지로 경남 합천과 전남 구례를 선택했는데,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한 보충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므로 잘 추진할 필요<br>○ 신규 원전 부지 선정 관련해서 예정지였다가 해제된 지역이 후보에 올려 검토한 적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br>○ 경주 월성원전 자회사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 분리조치 등 피해자 중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조치 필요 |
| <안전문제> | ○ 원전 내 설치된 CCTV 90%가 200만 화소로 성능이 낮으므로 보안과 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br>○ 원전 정비 작업 인력이 협력업체의 직원으로 소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외주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화시킬 수 있는 대책 검토 필요<br>○ 북한 오물풍선 부양 관련해서 원전 등 발전소에 낙하 대비 훈련 및 군·경찰과의 처리 협조 등 철저히 할 필요<br>○ 한울 1·2호기에서 해파리로 인한 발전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취수구의 감시체계 강화 및 제거설비 보완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 필요 |

## 사.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 1) 한국과학기술원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무기계약직 연구자의 육아휴직이나 퇴직금 지원을 위한 기관의 간접비 산출 기준 확대를 검토할 필요<br>○ 경남지역에 카이스트-아세안공학기술원 대학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br>○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생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br>○ 한국과학기술원의 대학원생 출산육아지원금제도의 지원 규모를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br>○ 4대 과학기술원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화캠퍼스를 갖춘 대학도시 조성을 검토할 필요<br>○ 학과우등장학금 오지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 2)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영재학교 입학생의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하므로 개선 필요 |

### 3) 광주과학기술원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광주과학기술원의 예산 감액, 부족한 기부금 모금 실적, 교수의 총장 고발 등은 모두 총장의 책임이 크므로 책임감을 느끼고 개선할 필요<br>○ 4대 과학기술원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화캠퍼스를 갖춘 대학도시 조성을 검토할 필요 |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의대 증원으로 인한 신입생 충원 미달이나 재학생 이탈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 4대 과학기술원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화캠퍼스를 갖춘 대학도시 조성을 검토할 필요 |

5) 울산과학기술원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의대 증원으로 인한 신입생 충원 미달이나 재학생 이탈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br>○ 소속 교수의 수도권 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학생의 연구 활동도 방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br>○ 4대 과학기술원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화캠퍼스를 갖춘 대학도시 조성을 검토할 필요 |

6) 과학기술인공제회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청년과학기술인적금이 중단되는 등 청년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계 청년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 |

7)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내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및 징계 절차에 대한 규정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 |

8) 한국원자력연구원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부산 기장군에 건설 중인 수출용 신형 연구 원자로 등 원자로 방사성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대한 국가 R&D 기술사업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 |

9)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에너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정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플라스마 응용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은 무엇인지 |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민원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가 되는지 등 개인정보 처리나 유출 관련 질의<br>○ 방심위 직원에 의해 민원인 IP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철저한 조사 필요.<br>○ 방심위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br>○ 민원인이 각기 다른 사람들인데 IP같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 공익제보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담당자가 판단할 문제인지.<br>○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내부직원의 의견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족 민원에 대한 사적이해충돌 문제 질의<br>○ 개인정보유출 의혹 뿐 아니라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고발 필요<br>○ 민원인 IP유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수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br>○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수사의뢰 전 내부 확인 등 절차진행 여부 등 질의<br>○ 내부직원이 IP주소와 함께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넘긴 것으로 보이며 철저한 조사로 엄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 필요<br>○ 방심위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량의 민원접수가 이루어진 사례로 3년 내 4건 밖에 없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부실자료 제출이 아닌지, 관련해서 보강된 자료 제출 필요<br>○ IP주소 유출 관련, 판례는 IP주소를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민원인 사찰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br>○ 방심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면 민원인 성별,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수집하고, IP주소, 브라우저 종류 등이 자동수집정보로 되어있는데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검토할 필요<br>○ 민원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법적처벌 대상이며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질의<br>○ 위원장 친인척에 의해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여부나 사전에 회피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br>○ 민원 여부와 상관없이 녹취록 조작의 진위여부에 대한 질의, 이에 기반한 보도의 중징계 처분 정당성 문제 여부 등 질의<br>○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충돌 문제에 대한 질의<br>○ 뉴스타파의 취재가 언론윤리헌장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여부 질의<br>○ 신학림·김만배 뉴스타파 보도 후 1년 6개월 가량 지나서야 집단민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질의<br>○ 김만배·신학림 녹취 관련 MBC 보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방심위 조치의 적절성 관련 질의<br>○ 위원장 친인척이나 지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민원제기를 유도하였는지 여부, 청부민원의 법적·도덕적 문제 등 지적<br>○ 신속심의 건수가 3~4건에서 40건 정도로 최근 급증한 이유에 대한 질의<br>○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에 대한 신속심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 지적<br>○ 류희림 위원장의 방심위원 위촉 후 위원장 호선과정까지의 문제점 지적<br>○ 민원인 정보유출 관련 감사와 류희림 위원장 이해충돌 사건에 대한 감사간 형평성 문제 지적<br>○ 민원을 신청한 당사자를 민원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대한 이해충돌 여지 등 적절성 질의<br>○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진행사항, 방심위 의결사항에 대한 소송패소 관련 질의<br>○ 사정기관의 방심위 표적심사, 대통령 수사무마의혹보도에 대한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 고발사주 공작, 청부민원 공익신고자 색출 등에 비추어볼 때 위원장이 방송장악의 행동대장 아닌지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 방심위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으로 보도·시사 등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을 행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br>○ 방통위가 국가기관 중 신뢰도 최악기관으로 꼽혔고 이는 방심위 심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 지적<br>○ 위원장 임의조퇴 사유 및 이후 행적의 업무 관련성,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감사실장과의 회동 등에 대한 질의<br>○ 업무추진비 관련 3만원 초과한 식비 집행, 임의조퇴 후 행적 등에 대한 감사 필요<br>○ 2023년 7~8월 방통위의 방심위 회계검사와 그로 인한 정연주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등 결과에 대한 형평성 등 질의<br>○ 류희림 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한 불법촬영 단정 발언, 국회 현안질의 청문회 불출석, 보복성 인사조치 등 지적<br>○ MBC PD수첩에 대한 방통위 제재조치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등에 대한 입장 등 질의<br>○ KBS 나비부인 관련해 권고조치를 내린 결정의 적절성 등 질의<br>○ 대통령이 위촉한 3인이서 전체회의를 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지적<br>○ 방심위·방통위 제재결정에 대한 소송 급증 문제 지적<br>○ 방심위 제재에 대해서 방통위 심의의결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 지적<br>○ 가짜뉴스 심의센터 반대의견을 낸 방송위 팀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지적<br>○ 프리덤 하우스 발표 2024년 인터넷 자유지수 하락, 국경없는 기자회 발표 언론자유지수 하락 등에 대한 지적<br>○ 방심위 직원들의 직무수행 평가결과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점, 위원장 직무수행에 대한 노조의 비판성명 등 지적<br>○ 구글 출장에서의 여비 등에 대한 내부감사 필요<br>○ 직원 대비 과도한 위원장 연봉 인상, 인사위 미개최로 인한 승진 적체 문제 지적<br>○ 위원장과 김대남 비서관 직무대행과의 개인적인 친분 여부<br>○ 류희림 위원장의 7월 22일 임기 만료 후 23일 즉시 다시 위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셀프감금·밀실회의 관련 질의<br>○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긴급 심의 안건 상정 졸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속 추진 관련 질의 |
| <방송심의> | ○ 선방위원장 추천권한을 부여한 방송사나 단체 등의 적절성,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의 징계·경고의 편파성 등에 대한 질의<br>○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류희림 위원장 간 친분과 그 임명 적정성 관련 질의<br>○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선임과정 및 인사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필요.<br>○ 재보궐선거에 대한 선방심에 공언련에서 민원을 넣고 공언련에서 추천한 위원이 심의하는 것은 이해충돌 아닌지, 한정석 선방심의위원의 자격 관련 질의<br>○ 한정석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SNS 게시글과 선거방송심의 적정성 질의<br>○ 한정석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의 5.18 내란, 한강 수상에 대한 폄하 등 페이스북 게시글의 편향성 및 위원자격에 대한 지적<br>○ 22대 총선에서 선방위의 제재가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질의<br>○ 방심위 직원들 70% 가까이가 언론노조원으로 방송내용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질의<br>○ 검찰을 협박하는 10월 3일 MBC 보도에 대해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는 방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지<br>○ 이재명 대표 검찰 구형에 대한 10월 1일 보도와 2022년 1월 보도 등 MBC 보도의 편파성에 대해 관심 가질 필요<br>○ 방통위 설치법 제18조제1항의 '공정성 보장'을 근거로 한 보도·논평의 공정성 심의의 문제점, 법 개정 필요성 지적<br>○ 방심위의 과징금 및 제재조치 의결이 언론사의 재허가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검열, 정치적 표적심의, 정치적 공정성 훼손 문제 등 우려 |
| <통신심의> | ○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온라인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바, 조치 필요<br>○ 유튜브 등 각종 플랫폼의 마약 정보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br>○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요구 급증하고 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으로, 불법유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필요<br>○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만삭임산부의 낙태시술과정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드 되어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과 대책<br>○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자살 및 성범죄 사건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 필요<br>○ EBS 공식 계정 게시물의 음란물 사진 댓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모색할 필요<br>○ 서울의 소리의 '김건희 영부인 명품백 수수 의혹 영상' 예고편에 대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부당한 긴급심의 안건 상정 지시 및 차단 시도 지적을 통해 민간 독립기구를 정권 충성의 도구로 쓰려 했던 위원장 행태 시정 필요<br>○ 통일TV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유튜버들에 대한 즉각 제재나 이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철저한 조치 필요.<br>○ 북한 찬양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접속 가능한 상태로 방심위가 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차단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와 긴밀히 공조할 필요<br>○ 허위 구인광고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br>○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으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수동 모니터링을 벗어나 전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br>○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보급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바, 관련 환경조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br>○ 딥페이크 관련 문제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디지털성범죄 정보 공공 DNA DB사업에 대한 투입예산이 얼마인지.<br>○ 디지털성범죄 정보 공공 DNA DB 사업의 성과자료 제출 책임을 방통위와 방심위가 서로 전가하고 있는바, 협의 후 성과 자료제출 필요.<br>○ 디지털성범죄 정보 공공 DNA DB 사업이 이미지 형식의 딥페이크 불법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br>○ 음란 성매매 정보 등 랜덤채팅 앱과 관련된 시정·적발 건수가 4년 만에 4.5배 증가한 상황으로, 인력 보강 필요<br>○ 나무위키와 운영의 불투명성 및 시정조치 필요성·가능성 등 질의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 나무위키에서 방심위가 접속차단의결한 게시글 2건을 삭제했는데, 나무위키 측과 이메일로 소통한 것인지<br>○ 허위정보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불법게시물 등이 나무위키에 게재되나 소통방법도 제한되며 운영주체도 불확실한바, 강력한 조치와 대책 필요<br>○ 딥페이크 음란물 시정요구가 2021년 1,900건에서 2023년 7,000여건으로 4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해외 정보에 대한 조치가 제약적인 점 지적<br>○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청과 방심위 간 공조 체계의 내용 등 질의<br>○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와 관련 구글 부사장과의 협의 결과 질의<br>○ 2024년 5월 21일 이후 유해 콘텐츠 삭제와 관련해 구글 측과 협의하거나 협약 등으로 문서화 하는 노력을 한 적 있는지<br>○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와 관련해 구글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와 구글이 보낸 서면답변이 다른 이유나 관련 조치 여부 등 질의<br>○ 에릭슨 부사장과의 유튜브 관련 합의가 없었다는 MBC보도에 대해 정정·반론요청 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질의<br>○ 방심위-텔레그램 간 불법정보 삭제요청시 즉시이행 확약 관련 확인<br>○ 불법 유해 콘텐츠 삭제를 구글에 요청하는 것뿐 아니라 이로 인한 수익을 동결시키는 식의 접근법에 대한 고민 필요<br>○ 구글이나 텔레그램 등 해외기업 접촉 시 외교적 수사나 협상에 능한 사람들이 있어야 할 필요<br>○ 통신심의 모니터링 심의 건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인력 및 예산은 감소된 바, 예산 및 인력의 충원 필요<br>○ 디지털성범죄 정보 건수가 급증하나 신고접수처리, 모니터링 업무 등에서의 인력이 부족하므로 확충 필요<br>○ 불법사이트 차단요청이 ISP사업자에 그치고 CDN을 통한 우회 문제가 지속되는 바,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 |

## 11) 한국방송공사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KBS와 EBS의 UHD 송출 관련 분쟁을 해결할 필요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 KBS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br>○ '김건희 파우치 박장범, 대통령 술친구 박민 제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 <이사회, 인사 및 노사> | ○박민사장이 이해충돌 관련 권익위에 고발당한 상태이고, 광복절 기미가요 논란,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수입 감소 등 문제가 있으므로 사장직 재도전은 부적절함.<br>○박민사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 사장이 사장직을 유지한 채 사장 공모에 지원하여 이해충돌 문제가 있고, 사장으로서 수행한 KBS 개혁에 대해 내부 직원의 반발이 많으며,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무시한 문제가 있음.<br>○박민사장은 수신료 분리정책, 최악의 경영실적, 최악의 콘텐츠 경쟁력, 신뢰도·영향력 최악, 리더십 붕괴, 비전 없는 KBS 등의 문제로 사장을 재도전 하면 안됨.<br>○이해충돌 고발 관련하여 이해충돌을 적용하려면 직무관련성, 사적이해관계가 있느냐 등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장 연임시 사무국장, 이사회 직원들 보직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br>○이석래 전 KBS이사가 박민사장을 반대하여 서기석 이사장이 의결정족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박민사장이 경영계획서를 직원의 협조를 받아 썼으며, 임명동의제를 파기하고, 시사교양국 폐지설 등 제작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음.<br>○박민사장이 KBS수신료가 분리징수를 추진하여 12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KBS재원을 어렵게 하고 있고, 사장 지원 경영계획서를 본인이 출근하지 않은 날 작성해서 제출하여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음.<br>○기술본부 팀장 53명의 보직 사퇴 원인은 무엇인지, 사장이 방송기술인협회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음.<br>○박민사장이 감사실에서 내보낸 사람들이 소송으로 복귀하여 현재 감사실 인원이 2배이고 감사실이 무력화되었으니 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요청하길 바람.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확보되지 않으면 KBS이사, 사장은 연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거 정연주 사장도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서 2달간 사퇴하고 부사장 체제에서 재도전한 바 있음.<br>○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방송 경력을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방송경력도 중요하지만 경영 능력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br>○박민사장의 업추비 사용 상세 내역 제출 필요.<br>○박장범, 김성진 등 사장에 지원한 후보자들의 경영계획서에 정권에 대한 충성 맹세와 현 박민사장의 경영 실패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음.<br>○박민사장의 경영계획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코로나로 출근하지 않은 날인데 경영계획서 작성에 누가 관여한 것인지, 현직 사장이 다시 공모하면서 직원에게 경영계획서를 부탁하는 것이 가능한지<br>○10월 8일에 기술본부 팀장 53명이 보직 사퇴한 이유는 조직개편을 협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임.<br>○방통위에 재허가 문서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조건이 삭제되었고, 이후 KBS 사장 공모 경영계획서에 "취임이후 경영성과'로 비정규직 감축이 치적으로 작성되어있는데 이것이 과연 치적으로 내세울 만 한 것인지 의문임.<br>○지난 KBS 사장 선임 시, 대통령과 방통위, KBS이사 이 3자가 신속하게 KBS 사장 인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봄.<br>○ KBS 감사에 대표이사를 감사할 수 없다는 증언은 잘못된 것임<br>○KBS사장 경영계획서 작성에 내부 직원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방송법 위반임.<br>○박민사장의 경영계획서 작성, 제출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br>○KBS 방송기술인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이례적이고, KBS 사장 지원 과정에서 조직을 활용한 정황이 있으므로 감사가 필요<br>○ KBS 정상화 추진이 정권 의도와 무관했는지, KBS 사장후보자에 대해 정권의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br>○ KBS 정상화 등 현재 추진했던 일들이 후임 사장이 임명되면 계속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 KBS이사회의 KBS사장후보자 지명에 대한 무효를 다툴 생각이 있는지.<br>○ 무급휴직 실시와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고,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br>○ KBS 고위직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일괄인상이 있었는지. |
| <수신료 및 경영> |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추징금 강제집행하려면 방통위 승인 필요한데 방통위의 미납금 파악 및 추징 대책 마련 필요<br>○ 금년 수신료 예산에 대해 과도하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이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핑계로 질적으로 안좋은 구조조정을 한 상태라고 봄.<br>○박민사장 취임 이후 KBS가 광고수익이 대폭 감소한 것은 박민 사장의 부족한 경영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함.<br>○수신료 문제는 조세 투입까지 생각해서 공영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br>○수신료 징수 비용도 증가하고 KBS 수신료 관련 업무 종사자수도 급증하였는데, 공영방송이 뭔지 모르는 국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임.<br>○박민사장이 KBS 수신료 예산을 40% 삭감한 것은 이것을 기회로 하여 프로그램 제작비 줄이고 구조조정하는 명목으로 명퇴하도록 하여 KBS를 어렵게 하려는 것임.<br>○수신료 분리징수는 KBS를 흔들기 위한 작업임.<br>○수익 다변화를 위해 BBC도 부동산 매각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 21대에 KBS가 보유한 부동산을 공적 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방안 마련 필요<br>○영국은 수신료 폐지 논의가 나왔다가 노동당으로 바뀐 이후 수신료를 유지하기로 하였음.<br>○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고, 수신료의 통합징수가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좋은 방안인데, 비전 제시를 통해 통합징수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br>○ KBS 경영계획서의 4대 핵심공약 첫 번째는 공영성 강화이고, 자산매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수신료 분리징수가 답이 되기는 어려움.<br>○ 수신료 통합징수로 바꾸기 위해 방통위와 시행령 개정 협의하는데 비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 |
| | 용이 들어가는지, 없다면 불안정한 재원 상태로 만들어서 직원들을 겁박해서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임.<br>○KBS의 수신료는 해외에 비하여 적은 수준임.<br>○과거 KBS 수신료 정상화는 민주당만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아님.<br>○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계약 내용이라는 이유로 공영방송사가 지급한 저작관 비용 자료제출을 거부함. 특히 북한 위성채널 교체로 국내 방송사들이 북한 방송을 수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수신료가 관행적으로 저작권료로 지급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함. |
| <방송·콘텐츠 보도·편성 및 제작> | ○ 과거 김일성 등 북한 인사들을 미화하는 방송을 공영방송에서 방영한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br>○ 제작인력의 퇴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작 여건을 개선할 필요<br>○KBS는 공영방송으로 공정성, 독립성이 중요하나 기미가요, 한글날 한글 자막 오기, 채해병 청문회 미방영, 김영선·명태균 압수수색 보도는 비중이 저조하고 윤석열 대통령 영일만 시추 발표는 과도하게 방송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br>○ KBS사장이 답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주진우의원 질의부분만 영상만 앞부분만 보도하고, 검찰도 명품가방이라고 한 것을 KBS가 고가가방으로 보도한 것은 왜곡임.<br>○ 메인뉴스 시청률이 MBC와 차이나고,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하며, 명태균 파문, 김대남 녹취록 파문, 김건희여사 불기소 권고 등의 보도량은 MBC, SBS 등의 절반도 안되며, 동해석유시추를 급작스럽게 발표하는 등 문제가 있음.<br>○ 명품가방을 '파우치'라고 하면서 굳이 대통령과의 특별대담을 했어야 했는지 의문임.<br>○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서 명품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사치품이나 생필품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지, 영부인과 관련해 건전성 측면에서 비판적 보도할 필요<br>○독도 실시간 영상에 대해 노후나 교체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전수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에 독도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음.<br>○광복절 나비부인 방송 관련하여 방심위를 통해 받은 행정지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직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br>○오페라 나비부인 등의 편성 문제 관련하여 KBS의 적절한 편성전략이 필요하고 기존 잘못된 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있음.<br>○ 나비부인 방영 날짜를 광복절 0시에 송출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시점이 언제인지<br>○지난 편성표가 영업비밀이라는 건 말이 안됨.<br>○ KBS 8·15 광복절 50일 전부터 '나비부인'이 편성됐는데 해명 필요<br>○ '나비부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 필요<br>○ 다큐인사이트 세월호 10주기 프로그램 방영이 논의 되었으나 방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br>○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관련해서 여러 정황 등을 볼 때 PTSD(천안함과 세월호)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위증으로 보임.<br>○ KBS 편성규약은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를 박민사장 체제에서 8개월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br>○ 체코원전 수주 관련 보도는 과잉보도하였다는 문제가 있음<br>○ 2021년에 (주)SR픽쳐스라는 중소 제작사가 KBS에 의해 교체당하였다는 지적이 있음.<br>○ 한동훈, 김여사에 공적지위 없다는 리포트가 다른 채널에 1,2번에 나온 것이 8번 리포트로 나갔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br>○ 황상무 전 수석이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에 대해 회칼테러를 언급하여 협박하였는데, KBS N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로 기용한 것은 문제가 있음.<br>○전현희의원의 짜깁기 녹취록 공개할 때 제목이 편향적으로 나간 문제가 있음.<br>○광복절 나비부인 방영으로 여론이 안좋을 때 기적의 시작을 방영하면서 역사에 왜곡되게 편집한 문제가 있음.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ㅇ기적의 시작에 대해 시청자위원회에서 밝힌 방송법상의 편성권 독립이 이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방송법은 실무자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데, 편성을 강행한 것은 실무자의 권한을 침해한 것임.<br>ㅇ이화영 녹취록 관련 보도를 국민의 힘 입장에서 보도함. |

## 12) 한국교육방송공사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ㅇ KBS와 EBS의 UHD 송출 관련 분쟁을 해결할 필요 |
| <이사회, 인사 및 노사> | ㅇ 유시춘 이사장 법인카드 감사 결과 부당집행한 업무추진비를 자체 환수 조치할 필요가 있고, 유시춘 이사장 아들이 마약반입으로 2심에서 유죄선고 받았는데 아들이 무죄를 받고 이사장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문제임.<br>ㅇ 유시춘 이사장은 자신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제출하는 직원들은 처벌하겠다고 겁박함. 유 이사장의 직권남용, 국회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자료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노력한 EBS 직원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조치할 것.<br>ㅇ 유시춘 이사장이 김정은 미화 상품을 출시한 것은 부적절함<br>ㅇ 유시춘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하여 도덕적 성찰이 필요하고 코로나 시기에 작가실에서 직접 요리하여 식사를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이길 바람.<br>ㅇ 유시춘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검찰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적발액수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생각인지.<br>ㅇ 유시춘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하여 환수조치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은 적 있는지.<br>ㅇ 유시춘 이사장이 관련 규정을 회피해 편법으로 연임하지 않았는지.<br>ㅇ 비상임인 유시춘 이사장이 이사국 차량을 전용차로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닌지. |
| <경영> | ㅇ EBS가 330억원 규모 수주 받은 업체로부터 접대 받은 의혹이 있고, 감사 들어가자 조작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이 있으므로, 내부고발자제도 마련 필요 |
| <방송·콘텐츠 편성 및 제작> | ○ 애니매이션 및 캐릭터 이름에 있어 외래어, 외국어 사용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br>○ 위대한 수업 컨텐츠는 좋으나 별도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한 것은 위험성이 높으므로, 향후에도 특정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경영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직원들 생각해서 비용 측면에서 현행 사업의 효율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 <학교 교육> | ○비상경영상황에 1년에 약 120만부씩 불용 교재로 폐기되고 있고, 저소득층 교재 무상지원 현황은 부족하며, 수능연계교재 오류 정정 건수도 너무 많고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음. |

## 13) 방송문화진흥회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MBC 보도의 공정성 관련하여 북한 열병식 보도, 의대정원 보도 등의 사례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br>○ 국군의 날 행사 관련 MBC에서 군사정권 방불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K-방산에 대한 홍보 측면에서도 좋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MBC가 부정적인 보도만 한 문제가 있는 등 이는 공영방송이라기 보다 진영방송으로 나가겠다는 느낌임.<br>○ MBC의 영업이익은 부동산 임대 수익금 때문에 좋아보이지만 투자를 잘못해서 105억을 날리고 자회사에서 100억을 날리는 등 방만경영을 하여 이에 대한 방문진 이사회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br>○ 안형준 MBC 사장 최종 면접 직전에 2013년에 벤처기업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진정이 있었고, 로펌 자문 결과 배임수재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CJ ENM 감사 당시 안 사장은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여 감사가 중단된 후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말을 바꾸었으므로 공영방송 사장으로 문제가 있음.<br>○MBC가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에 무리한 사업으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낸 것에 대해 방문진이 이를 방치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수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용하는지, 감사원 감사 결과 주의로만 그친 것은 방문진에 책임이 있음.<br>○ 6~8월 방심위 내용에 대해 보도한 MBC가 류희림위원장의 방심위 운영을 비판하는 등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고 보도하는지 성찰 필요<br>○어떠한 경우에도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문화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br>○ MBC 경영평가 결과 QI평점에서 2위(KBS 1위), MBC 요약 손익계산서를 보면 23년 11월부터 매년 142억씩이 부동산 수익임.<br>○이재명 대표가 국내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했을 때, 유독 MBC만 뉴스데스크 14번째로 보도하면서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넣지 않았고, 3년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3년형이 확정된 사실을 15번째로 보도하였는데, 편파보도로 보임.<br>○ 로펌 지평에 방문진과 MBC가 많은 사건을 몰아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음.<br>○지평법정책연구소와 법무법인 지평은 큰 관련성이 있고, 방문진이 MBC의 편향방송을 감싸는 발언은 적절하지 못함<br>○MBC가 다수의 유튜브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 수익금이 영업비밀이라고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고, 유튜브 수익금을 확인하여 보고할 필요<br>○거액투자와 손실이 반복되는 등 MBC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방문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br>○방문진은 MBC의 독자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MBC에 대해 일일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임.<br>○ MBC는 국민의 방송인데 감사원 감사에도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보도의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에 대해 따져 묻기가 어려우며, 심의할 사람도 없고 감시할 기관도 없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br>○ 유시춘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하여 환수조치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전화를 한 적 있는지.<br>○ MBC에서 이루어진 노조 탄압사건과 부당노동행위 및 박성제 전 사장 등에 대한 재판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br>○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 기소 후 유죄판결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것 |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 인지, 방문진에서 이를 관리할 책임이 없는지<br>○ 서부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에 의한 노동조합 탄압 사건이 재판 중인 것 알고 있는지, 이를 파악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br>○ MBC 부당노동행위 관련, 기자를 영상편집자로 전환하려 한 교육 전에 임신 사실을 몰랐던 인재개발부장이 왜 가해자처럼 얘기가 되는지<br>○ MBC 안형준 사장이 노조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br>○ MBC 1노조의 3노조에 의한 탄압이 아닌 3노조와 사측 간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 아닌지 |

## 1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사항별 |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
| <일반> | ○ 민간기업도 발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br>○ 국가의 지원을 받은 연구사업 관련 자료가 SNS에 게재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br>○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권리 확보·행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br>○ 누리호 발사에 군수 시설에서 제조한 미수용 화약을 활용한 것은 법적 미비 사항으로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br>○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국비사업의 연구성과물 소유에 대해 공동 해법의 논의 필요 |

# 7.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1건)

<일반: 30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 R&D 협력 강화를 위해 보스턴 총영사관에 과학 담당 주재관의 파견을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과천과학관의 관장이 너무 자주 교체되므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관장직 수행 기간 확대를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도를 드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등 최신 과학 기술을 접목해 독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R&D의 편성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 R&D가 지역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관리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성과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현실에 맞지 않는 출연(연) 통상실시권 의무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연구자의 육아휴직이나 퇴직금 지원을 위하여 기관의 간접비 산출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조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여성 과학자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과학기술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작성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 관리에 노력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기관의 사이버 정보보안 사고 대응체계가 미비하므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R&D 예산이 증가하게 된 경위와 필요성,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촘촘히 검토해 볼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R&D 예산의 올바른 집행에 대한 파악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R&D 협약서(계약서)에 연구성과의 소유와 분배계획 및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명시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및 관리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및 총괄부원장의 비위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의 정부 총지출 5% 수준에서 유지”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인력 및 기술의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하므로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형숙 교수와 관련한 정부의 부당한 과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전공자인 특정 교수의 초거대 AI R&D 수주에 대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보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등이 인사평가 시 소속 연구자가 등록한 특허를 그 활용도에 관계 없이 인사평가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특허의 난립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조사할 경우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독립성을 갖는 별도 기구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부 청사 화장실에 있는 전범기업 창업자 문구에 대해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대응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소비자원이 마련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이 분쟁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공정위와 협의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기계좌의 신속한 차단과 권리침해 콘텐츠로 획득한 수익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대응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로 획득하는 수익을 차단·동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플랫폼에서 유명인들이 광고에 도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 방통위와 협의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앱 UI·UX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프론트엔드 유닛 테스트

등 사용성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범부처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주요 기관들의 중국산 CCTV 사용 현황 전수조사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보안 관리를 위해 국정원에서 마련 중인 다중계층보안 기본계획 이후 보안체계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기초원천연구정책: 7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 등 글로벌 R&D 예산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태이론물리센터의 높은 직원 퇴직률, 폭행사건 발생, 소장의 이사회 사유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컴퓨터 개발 추이를 봤을 때 양자컴퓨팅이 유일한 대안이므로 국가차원의 육성 전략을 수립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애기본연구 폐지에 따른 연구인력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당 기획평가 예산이 38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저조하므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이후 13년간 3조 원이 투자되었는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명윤리법으로 인하여 연구의 자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연구성과혁신: 8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회계 관리 문제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소상 내역을 상세히 파악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기술료 수입의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인 기술이전 전담인력 조직의 수와 전문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TLO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사업 과제 파편화 등 R&D 효율성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PBS 제도에 대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연구자의 정년을 대학 교수와 동일하게 65세로 연장하는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의 인건비 및 경상비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연구소기업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보완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수의 연구기관 후임 원장 임명 지연이 발송하고 있는바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일 공동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연구 역량이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미래인재정책: 11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 학생의 의대 진학으로 인하여 4대 과학기술원 정원 미달 등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수립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출산·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인력풀 시스템 도입 등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2+1 제도로 개편한 이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주과학기술원 부지매입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상향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제도 도입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계의 관리직이나 책임연구원에 여성 비율이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학기술원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화캠퍼스를 갖춘 대학도시 조성을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기원의 학생 수와 학생인건비의 증·감에 관하여 정확히 조사하고 실제 학생인건비가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조치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인건비 지원 규모가 다른 과학기술원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개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기원 상임감사의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바이오 분야에 대하여 4대 과기원 교수의

정년을 해제하여 연구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과학기술정책: 1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의 수도권 집중 심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에 적합한 전략산업 육성을 검토할 것

<성과평가정책: 3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실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KISTI에서 구축하고 있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적극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데이터 이관이 늘어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공고 과제 및 수행 과제 조회 검색 시간 더딤, 연동 불안정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제를 선정받은 연구 책임자가 가족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바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정보통신정책: 7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포용정책에 있어 우정사업본부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배움터 확대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늘릴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도메인 기간 만료 후 악용 방지를 위하여 안내조치 등 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거래 관련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공률이 저조하고, 소비자원 및 공정위에서 만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관련하여 공정위와 협의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AI 카페를 전국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오남용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

<인공지능기반정책: 12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관리 중인 자격시험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이 준비되는 대로 보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컴퓨팅인프라 구축 및 활용에 있어 광주AI집적단지의 활용을 고려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사업에서 부적절한 연구자에게 예산을 지원하였으므로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생태계 기반을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전문가들을 통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분야 예산 투자를 늘릴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에 집중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의 필요성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의하고 대국민 소통방안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사례 검토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절차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관련 공공·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의 필요성 및 안전성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조성하고 대국민 소통방안을 마련할 것

<소프트웨어정책: 1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분야 해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정보통신산업정책: 3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반도체 개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원을 강화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수급 등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시 글로벌 빅테크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할 것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 9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외국 클라우드 개방 관련 공공데이터 보호와 활용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투어 해킹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지 지연을 아는 순간부터 바로 규제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큐싱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사무소 본원 이전을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대가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사이버 전력 지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비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SAP 등에 의한 과도한 보호가 국내 클라우드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

<통신정책: 30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범스팸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사업자를 관리하고 문자재판매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키즈폰에 대한 불법 음란 스팸 발송 방지를 위해 통신3사가 키즈폰에 번호 부여시 미사용번호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측정치 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한 5G 실제 속도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요금제를 개편한 결과 발생한 LTE-5G 가격 역전을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금제는 가입 제한하는 등 LTE 요금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의 데이터전송 속도 저하문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

한 개선 조치를 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고객정보 불법탈취 및 변조와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통신사를 철저히 관리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일부기기의 자동로밍이 차단되지 않아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수록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로밍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 만료 무약정자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선택약정 자동연장, 일괄할인 등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보고 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 관련 선택약정할인에 한해 유보신고제를 통신3사로 확대하고 제조사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취약계층의 디지털접근권 강화를 위해 디지털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와 함께 고객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깡을 이용한 범죄 및 불법광고에 대해 조사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르완다 4G망 구축 관련 독점권 취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고하고, 해외에서 기업이 안심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역무 관련한 불합리한 초고속 인터넷 설치비용 전가 문제에 대하여 확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역무 제공 의무자에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망사용료 관련하여 구글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국회와 함께 노력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푸핑, 공공 또는 사기업의 발신번호를 이용해 기만하는 문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부적절 메시지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신번호 변작기의 적극적인 단속 조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발의될 경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신번호 거짓표시 건수 증가에 대응하여 신고제도가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대포폰 문제와 이통3사 자회사들의 영향력 완화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시장 확대를 위해 로밍 등 이용자 편의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B 알뜰폰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사항을 살펴볼(확인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도매제공대가 인하 등의 노력을 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검토하고, 폰케어 보험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것

○ 과기정통부는,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의 경우에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텁게 심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인지 등에 관해 검토 후 보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화관람료 정산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데이터 기부 시스템 도입을 사업자와 논의할 것

<방송진흥정책: 4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 전용 T-커머스를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이 심화되고 홈쇼핑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므로 홈쇼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대안을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PTV에 입점해 있는 PP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랙필터 설치, 열악한 근로조건 등 HC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조치할 것

<전파정책: 4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이동통신사 무산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와 과기부의 과실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취소와 관련하여 내부조사 후 보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이동통신사에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된 경위와 항간의 의혹제기에 대해 파악한 후 향후 재추진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에서 적합성평가 면제 전자기기를 구입한 후 1년이 되기 전 되파는 경우에 대해 연간 300건 정도 처벌하고 있는데 적절한 유예기간을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파 유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 나. 방송통신위원회(73건)

<일반: 5건>

○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생토론회 관련 수의계약 진행, 계약서 미작성 및 결과보고서를 잘못 작성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주의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 중인 상황에서 유튜브에 반복적으로 출연하여 정치적발언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문제가 있고, 특정 정당 및 방송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월급을 수령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해 조치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위원장이 최철호 증인을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둘 다 공언련에 속해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이해충돌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인력의 파견은 방통위의 수사기관화를 초래하고 인혁처 승인도 없는바, 파견직원의 원소속기관으로 복귀를 추진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적 방송장악 때문에 소송비가 증가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소송비 예산을 편법 전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방송정책: 12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결이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등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재허가 등을 받지 않은 방송사업자가 방송 촬영 중에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방송통신위원회는 SM 그룹의 울산방송 소유는 방송법 위반이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후속 조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민방을 비롯한 민방 소유구조 전반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오너에 의한 방송국 사유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 철도 터널의 98%가 FM라디오 수신이 불량한 등 재난방송 수신환경에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41.5% 삭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방송통신위원회는 DMB 재난방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

ㅇ방송통신위원회는 경인방송 주주간 이면계약서 문제가 있음에도 24년 1월에 재허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ㅇ방송통신위원회는 아리랑 TV와 국악방송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소관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ㅇ방송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이 보조금으로 방영권 구매 전체 금액의 70% 이상을 국악과 관련 없는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에 사용하여 국악방송 보조금 수익의 관리가 부실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을 경우 지방방송사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으로 사업 활성화를 검토할 것

ㅇ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OTT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므로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ㅇ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용자정책: 44건>

ㅇ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강제 정책과 높은 수수료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과징금을 추징하고 미국법상 청구권 행사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ㅇ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할 때 애플에서는 부가세 포함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여 수수료를 33% 가져가는 등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CP가 구글인데, 구글이 국내기업인 네이버, 카카오와 달리 망 이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이 국내 이용자 매출이 해외 매출로 산정되거나 미국 본사로 이전하는 등의 이유로 낮게 잡혀 조세회피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행태를 볼 때 국내 토종기업들이 역차별 당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OTA(Online Travel Agency)의 정크 피(junk fee) 등 소비자에게 부과되지만 명시되지 않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채무자를 협박하고 추심하면서 온라인 상에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경로의 90%가 네이버 유입으로, 유사 키워드 검색시 서민금융진흥원 링크가 포털에 나타나도록 협의하였는데, 네이버는 노출 빈도가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치할 것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2년 약정한 소비자의 위약금을 1년 약정 소비자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등 불공정약관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방통위의 안내에 따라 단통법 규정을 지키니 공정위가 담합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문제가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진 규제집단으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국무조정실을 통한 업무조정을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KT 스카이라이프의 KT 망사용료 절감이 낙하산인사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할 것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전환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판매 관련 허위과장광고 등 온라인 성지점의 월 평균 신고건수가 작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중단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블랙컨슈머 선정 시 이용자 사전고지 및 소명기회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당근마켓에서 미성년 구인 정보가 유통되면서 범죄 대상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민형사 사건 관련 특정 플랫폼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당근마켓이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면서 범죄에 노출되거나 종교 포교에 활용되는 등 미성년자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 연휴에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27명에 이르는 문제가 있으므로 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는 무료로 몇 십초 안에 사람 얼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 관련 인강 등 컨텐츠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을 조속히 진행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들의 SNS 중독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연구결과가 있고, 영, 프, 미국CA 등은 SNS 사용 제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는 보호조치가 없으므로 연구용역이 종료된 이후 대책을 마련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1년 전부터 네이버 투명성 검증 조사 중인데 그 목표가 여당을 지지하는 언론매체를 뉴스 콘텐츠 제휴매체로 선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유의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OTT서비스에 대한 국내요금 인상은 우리나라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캐나다나 프랑스 등 해외국가에서 넷플릭스가 OTT 관련 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넷플릭스가 기금에 재원을 납부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구글과 같은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문제가 심각하고,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한중 경쟁산업분야에서 중국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댓글을 게재한 정황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등 해외플랫폼에서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가 노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들이 해외 쇼핑몰의 혐오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팬트리 소속 크리에이터가 사실상 불법 성인물을 판매하는 등 팬트리의 운영 정책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불법 성인물 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메타 등을 통해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 문제가 되므로, 음란성 콘텐츠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렉카, 가짜뉴스 문제 등을 막는 방법으로 이로 인한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범죄 등과 관련하여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며 경제적 수익에 대한 몰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경찰서, 소방당국이 요청하는 GPS 정보조차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 기관이 늘어나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가능성과 불안감이 높아지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일TV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유튜버들에 대한 즉각 제재나 이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및 종편방송과 홈쇼핑 연계편성 문제가 심각한 바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문자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 및 대책이 미흡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문자가 23년에 전년대비 20배 증가하였고, 대량문자 전송사업인증제를 시행했으나 90%가 미신청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주요 불법 스팸 발송 재판매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해 차단의무를 강화하는 등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방송통위원회는 불법스팸이 폭증하고 국회가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였음에도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바,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공공 DNA DB 사업의 성과자료 제출 책임을 방통위와 방심위가 서로 전가하고 있는바, 협의 후 성과 자료를 제출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공공 DNA DB 사업이 이미지 형식의 딥페이크 불법성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사이트 차단요청이 ISP사업자에 그치고 CDN을 통한 우회 문제가 지속 되고 있으므로,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지도에 국가보안시설이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방송기반정책: 4건>

ㅇ방송통신위원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등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감사할 것

ㅇ방송통신위원회는 KBS '학교 2021' 드라마 제작 관련 외주제작사에 대한 KBS의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

ㅇ방송통신위원회는 SBS M&C 출범 이후 SBS와 지역민방의 광고배분비율이 75:25에서 80:20로 변경되어 지역민방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ㅇ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3사가 재난방송을 새벽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방송평가에 총량기준으로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YTN 관련: 4건>

ㅇ방송통신위원회는 의무송출 제도개선 합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성·공익성 차원에서 의무송출특혜를 받은 보도PP에 대해 의무송출특혜폐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ㅇ방송통신위원회는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외부 압력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분 매각 경위 및 절차, 주간사 선정 및 매각 방식 결정,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심사·자문한 과정의 적절성,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할 것

ㅇ방송통신위원회는 YTN의 모바일 상품권 사업 등으로 인한 손실과 이로 인한 소비자/시청자 기망행위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부과한 조건의 이행 여부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해 점검할 것

ㅇ방송통신위원회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호주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호주 출장의 사실관계 및 활동 내역을 조사하여 YTN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경선 회장의 활동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TBS 관련: 4건>

ㅇ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TBS가 폐국 위기로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방송통신위원회는 TBS의 상업광고를 허용하여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민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정 기업을 대주주로 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러한 실질적 지배구조 변경은 위원회 의결사항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TBS 정관 변경과 관련해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할 것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20건)

<일반: 9건>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합리화를 위한 선제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주변 불법 드론 탐지에서 후속조치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논탐지장비(젬스) 구축 국산화 연구부정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자체 검증 연구윤리 조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감사원 감사 요청을 고려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진 대비 내진설계 등 원전 안전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상용화를 위한 통합 인허가 검토 등 철저한 안전 규제 기준을 마련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시설에 대한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군과 관련한 대테러 또는 특수전 대비 태세와 훈련을 충분히 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 27일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의 장관급 행사에서 총리나 대통령급 행사로의 격상을 검토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을 위해서 미국 NOAA 등과 해수부 포함 범정부 TF를 통해 논의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포털 한국어서비스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안전정책: 4건>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3·4호기(새울 원전 1·2호기) 등에 설치된 터빈 구동 보조 급수펌프의 전원 공급 방식인 축전지방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국 핵잠수함 침몰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해수에서 방사성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4호기 냉각수 누출 사건 관련 분석장비 정밀도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신중하게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허용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계속운전 허가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동일 노형 반복인데도 심사기간이 길거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어려움으로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방사선방재: 7건>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방사선발생장치 신고기관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등 안전점검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공기 승무원 등 우주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 직업군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시 원안위에 의무 보고 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법 상 결함가공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적극 요청하여 수거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활어차 해수 방사능 분석 횟수와 분석 핵종을 확대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 측정기 대여사업 관련 제품에 대한 측정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측정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물질 이리듐 192가 서울 방배동 대한검사기술에 방치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라. 우주항공청(7건)

<일반: 1건>

○ 우주항공청은 항우연 직원의 기술 유출 시도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우주항공정책: 3건>

○ 우주항공청은 우주인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이 부족하므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 우주항공청은 국가우주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등 우주항공 정책의 의사결정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우주수송부문: 3건>

○ 우주항공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를 적극 추진할 것

○ 우주항공청은 경제성을 고려한 재사용발사체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재사용발사체 발사를 위한 발사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우주항공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하여 성공적인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공유·활용에 보다 진취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 마. 소속기관

### (1) 우정사업본부(6건)

○ ESG투자를 추구하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점검하고 문제 소지가 있다면 시정 방안을 강구 할 것

○ 우정사업본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우체국에서도 우편이나 택배 외에 금융서비스도 제공할 것

○ 우정사업본부는 1개 읍·면에 1개 우체국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행정당국·경찰·보건소 등과 협조하여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노력할 것

○ 우정사업본부는 안전장치가 미흡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 운행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우체국은 현재 대출 업무를 못하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시군 지역·농어촌 등 전국 서민들을 대상으로 낮은 이자로 대출하는 포용금융 역할을 검토할 것

○ 우체국보험 가입한도가 30년 가까이 동결되어 있는데 우정사업본부는 과기부와 협의하여 증액할 것

(2) 국립전파연구원(1건)

○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연구(R&D) 사업이 법정 연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전액 삭감된 이후 2025년에 비R&D 사업으로 변경되어 예산이 배정되었으므로, 2024년 전액 삭감 사유 및 변경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

(2) 국립중앙과학관(1건)

○ 국립중앙과학관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 국립과천과학관(1건)

○ 국립과천과학관은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 전시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바. 위원회 선정 공공기관

### (1) 한국연구재단(3건)

○ 한국연구재단은 국비가 지원되는 연구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와 연구비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책임자가 가족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키는 경우에 대하여 충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연구재단은 과제당 기획평가 예산이 38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저조하므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 (기초과학연구원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1건)

○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교육부 산하 연구원과 협력하여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3) 한국원자력의학원(1건)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산하 원자력병원의 장비와 건물 등이 노후화되어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2건)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초거대 AI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사업이 2021년도 사업인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개발과 사업의 내용 거의 동일하여 중복 지원이므로 과제 선정을 취소할 것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핵심사업 아이템 설계, 앵커기업 유치, 제조기업 데이터를 강화하고 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것

### (5) 한국인터넷진흥원(18건)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가도메인 기간 만료 후 악용 방지를 위하여 안내조치 등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외직구 IP카메라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쇼핑 플랫폼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 대한 보안안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국산 저가 와이파이 공유기 해킹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외직구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SMS-P, CSAP, 신규 도입 예정인 MLS 등 다양한 규제로 산업계 혼란 우려가 있으므로 행안부 및 국정원과 함께 정책 방향성을 논의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소기업 사이버침해 대응 예산이 삭감되었고, 대응인력도 충원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클라우드산업 발전과 보안의 균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국 사이트에서 한국인 계정정보가 거래되고 있으므로 관련 시스템을 점검·구축하여 보고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고, 북한에 의한 공공기관 해킹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계획을 보고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가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서울 잔류 인원을 지방 본사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 해결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관계법령 등을 정비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안전진흥원, 인터넷보안진흥원 등 실제 업무의 성격에 맞게 기관명칭 변경을 검토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 시 신고 및 대응시스템을 완비하고 홍보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관리조치를 마련하여 보고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고거래 관련 분쟁조정에 소비자원 및 공정위에서 만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직접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모두투어에서 해킹 이후 72시간 이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조사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변조된 QR코드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불법 스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및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것

### (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3건)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하여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평가를 서울이 아닌 지방이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K-컬쳐 확산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 (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8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배움터 예산 삭감 및 경남지역 센터 부재와 관련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앱 UI·UX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프론트엔드 유닛 테스트 등 사용성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부정 사업비를 환수할 것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노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개선을 위해 디지털배움터와 관련하여 농·산촌 지역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것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AI 관련 연구개발, 인재육성, 인프라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대폭 지원할 것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문서가 대부분 아래한글로 제작되어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이를 개선할 것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실적이 저조하므로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포용산업 관련 장기적인 지원과 수요 창출을 위한 시장 분석 및 기술 수준 등 조사·분석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

### (8)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1건)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반려동물 데이터 표준화 등 국가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 기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

(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수익구조가 방송광고의 총량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방송규제 완화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노력할 것

(10) 시청자미디어재단(1건)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이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문제, 대통령 부인 옹호발언 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할 것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건)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제논탐지장비(젬스) 구축 연구개발과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로 인해 해당 사업이 표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2) 한국원자력안전재단(2건)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제논 탐지장비 구축 연구개발과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것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방사선 이용 신고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미신고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한 경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

(13) 한국수력원자력(주)(9건)

○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원전 수출 수주 성공을 통한 국익 창출을 위해 수익성 부족에 대한 검토, 지적재산권 소송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치밀한 협상 전략을 수립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은 에너지혁신성장펀드의 원전 분야에 투자하는 주목적 투자 비율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시설의 출입, 출입증 관리 및 주변의 드론 탐지를 철저히 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해체 산업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 월성원전 자회사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 분리조치 등 피해자 중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 설치된 CCTV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정비 작업 인력이 협력업체의 직원인 소위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은 북한 오물풍선의 원전 등 발전소에 낙하 대비 훈련 및 군·경찰과의 처리 협조 등을 철저히 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울 1·2호기 취수구의 감시체계 강화 및 제거설비 보완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 사.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 (1) 한국과학기술원(6건)

○ 한국과학기술원은 무기계약직 연구자의 육아휴직이나 퇴직금 지원을 위한 기관의 간접비 산출 기준 확대를 검토할 것

○ 한국과학기술원은 경남지역에 카이스트-아세안공학기술원 대학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과학기술원은 대학원생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과학기술원은 대학원생 출산육아지원금제도의 지원 규모를 현실에 맞게 확대할 것

○ 한국과학기술원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화캠퍼스를 갖춘 대학도시 조성을 검토할 것

○ 한국과학기술원은 학과우등장학금 오지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2)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1건)

○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입학생의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하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3) 광주과학기술원(2건)

○ 광주과학기술원은 예산 감액, 부족한 기부금 모금 실적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광주과학기술원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화캠퍼스를 갖춘 대학도시 조성을 검토할 것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2건)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신입생 충원 미달이나 재학생 이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화캠퍼스를 갖춘 대학도시 조성을 검토할 것

(5) 울산과학기술원(3건)

○ 울산과학기술원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신입생 충원 미달이나 재학생 이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울산과학기술원은 소속 교수의 수도권 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학생의 연구활동도 방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울산과학기술원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화캠퍼스를 갖춘 대학도시 조성을 검토할 것

(6) 과학기술인공제회(1건)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청년과학기술인적금이 중단되는 등 청년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계 청년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7) 국가과학기술연구회(1건)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소속 출연(연) 내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및 징계 절차에 대한 규정 등 제도를 보완할 것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26건)

<일반: 5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직원에 의해 민원인 IP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유출 의혹 뿐 아니라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고발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원인에 대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검토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임의조퇴 후 행적 등에 대해 감사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월 22일 임기 만료 후 23일 즉시 다시 위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셀프감금·밀실회의와 관련하여 의혹을 투명하게 감사하고 소명할 것

<방송심의: 2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징금 및 징계 처분이 언론사 재허가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검열, 정치적 표적심의, 정치적 공정성 훼손 등의 문제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보도의 편파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통신심의: 19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긴급 심의안건 상정 졸속 추진 건과 관련한 진상을 파악하고 소명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부당한 긴급심의 안건 상정 지시에 대한 객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온라인에 불법 유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조치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 등 각종 플랫폼의 마약 정보 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누누티비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만삭임산부의 낙태시술과정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의 자살 및 성범죄 사건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EBS 공식 계정 게시물의 음란물 사진 댓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모색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일TV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심의 요청 건에 대해 즉각 심의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북한 찬양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접속 가능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차단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와 긴밀히 공조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허위 구인광고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여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수동모니터링을 벗어나 전자시스템을 구축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보급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바, 관련 환경조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 성매매 정보 등 랜덤채팅 앱과 관련된 시정·적발 건수가 4년 만에 4.5배 증가한 상황으로, 관련 인력의 보강에 노력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 모니터링 심의 건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인력 및 예산은 감소된바, 관련 예산 및 인력의 충원에 노력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건수가 급증하나 신고접수처리, 모니터링 업무 등에서의 인력이 부족하므로 인력확충에 노력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정보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불법게시물 등이 나무위키에 게재되나 소통방법도 제한되며 운영주체도 불확실한바, 강력한 조치와 대책을 검토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유해 콘텐츠 삭제를 구글에 요청하는 것뿐 아니라 이로 인한 수익을 동결시키는 식의 접근법에 대해 검토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글이나 텔레그램 등 해외기업 접촉 시 외교적 수사나 협상에 능한 인력을 갖추는 것을 검토할 것

### (9) 한국방송공사(20건)

<일반: 2건>

○ 한국방송공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와 UHD 송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방송공사는 신뢰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

<이사회, 인사 및 노사: 7건>

○ 한국방송공사는 박민사장이 사장직에 재지원하면서 사장직을 유지하여 이해충돌 문제 및 직원을 통해 경영계획서를 작성한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한국방송공사는 박민사장이 감사실에서 내보낸 사람들이 소송으로 복귀하여 현재 감사실 인원이 2배이고 감사실이 무력화된 상황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방송공사는 박민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 내역에 대해 공개할 것

○ 한국방송공사는 KBS감사가 대표이사를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검토

할 것

ㅇ 한국방송공사는 당초 박민사장이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재검토할 것

ㅇ 한국방송공사는 박민사장의 경영계획서 작성, 제출 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ㅇ 한국방송공사는 KBS 방송기술인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이례적이고, KBS 사장 지원 과정에서 조직을 활용한 정황이 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

<수신료 및 경영: 3건>

ㅇ 한국방송공사는 박민사장이 KBS 수신료 예산을 40% 삭감하여 프로그램 제작비 줄이고 구조조정하는 명목으로 명퇴하도록 하여 KBS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수신료 예산에 대해 재검토할 것

ㅇ 한국방송공사는 수익 다변화를 위해 BBC도 부동산 매각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 21대에 KBS가 보유한 부동산을 공적 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 매각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ㅇ 한국방송공사는 KBS 경영계획서의 4대 핵심공약 첫 번째는 공영성 강화이고, 자산매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수신료 분리징수가 답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할 것

<방송 · 콘텐츠 보도 · 편성 및 제작: 8건>

ㅇ 한국방송공사는 과거 김일성 등 북한 인사들을 미화하는 방송을 공영방송에서 방영한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ㅇ 한국방송공사는 제작인력의 퇴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작 여건을 개선할 것

ㅇ 한국방송공사는 기미가요, 한글날 한글 자막 오기, 채해병 청문회 미방영, 김영선·명태균 압수수색 보도는 비중이 저조하고 윤석열 대통령 영일만 시추 발표는 과도하게 방송하는 등의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할 것

ㅇ 한국방송공사는 독도 실시간 영상에 대해 노후나 교체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ㅇ 한국방송공사는 광복절 나비부인 방송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받

았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할 것

○ 한국방송공사는 KBS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를 박민사장 체제에서 8개월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한국방송공사는 2021년에 (주)SR픽쳐스라는 중소 제작사가 KBS에 의해 교체하였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한국방송공사는 기적의 시작과 같은 역사왜곡 프로그램 방영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10) 한국교육방송공사(8건)

<일반: 1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와 UHD 송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이사회, 인사 및 노사: 2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유시춘 이사장 법인카드 감사 결과 부당집행한 1,600만원을 자체 회수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과거 유시춘이사장이 김정은 미화 상품을 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경영: 1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330억원 규모 수주 받은 업체로부터 접대 받은 의혹이 있고, 감사 들어가자 조작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내부고발자제도 마련에 대해 검토할 것

<방송·콘텐츠 편성 및 제작: 3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애니매이션 및 캐릭터 이름에 있어 외래어, 외국어 사용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해 개선할 것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위대한 수업 컨텐츠는 좋으나 별도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특정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만드는 방식은 지양할 것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경영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직원들 생각해서 비용 측면에서 현행 사업의 효율화 방식을 검토할 것

<학교 교육: 1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비상경영상황에 1년에 약 120만부씩 불용 교재로 폐기되고 있고, 저소득층 교재 무상지원 현황은 부족하며, 수능연계교재 오류 정정 건수도 너무 많고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1) 방송문화진흥회(4건)

○ 방송문화진흥회는 MBC가 잘못된 투자로 105억을 날리고 자회사에서 100억을 날리는 등 방만경영을 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치할 것

○ 방송문화진흥회는 로펌 지평에 방송문화진흥회와 MBC가 사건을 몰아주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해 유의할 것

○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유튜브 수익금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튜브 수익금을 확인하여 보고할 것

○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독자성, 독립성을 보장하므로 MBC에 대해 일일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것

### (12) 한국항공우주연구원(4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민간기업도 발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은 연구사업 관련 자료가 SNS에 게재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권리 확보·행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국비사업의 연구성과물 소유에 대해 공동 해법을 찾기 위하여 노력할 것

# 8. 기타사항

## 가. 일반증인·참고인 출석현황

| 출석일 | 출석기관 (출석장소) | 성 명 | 구 분 | 직업 및 직위 | 신문요지 (감정사항) | 출석 여부 |
|---|---|---|---|---|---|---|
| 10. 7. (월) |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 (국회) | 이건 | 증인 | 전) 여성신문 부사장 | -KBS 이사선임관련 | 불출석 |
| | | 이인철 | 증인 | 변호사 | -KBS 이사선임관련 | 불출석 |
| | | 임무영 | 증인 | 임무영법률사무소변호사 | -방문진 이사선임 관련 | 불출석 |
| | | 이진숙 | 증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정지) | -방통위 운영관련 | 출석 |
| | | 이상준 | 증인 | 경기남부청 경감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 출석 |
| | | 이종민 | 증인 | 국세청 (5급)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 출석 |
| | | 강문우 | 증인 | 서울서부지검 검찰주사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 출석 |
| | | 고종현 | 증인 | 경찰청 경감 (현재파견)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 출석 |
| | | 김기철 | 증인 | 경찰청 경정 (현재파견)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 출석 |
| | | 김문준 | 증인 | 감사원 감사관 (현재파견)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 출석 |
| | | 강우진 | 증인 | 서울청 혜화경찰서 경감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 출석 |
| | | 박동찬 | 증인 | 국세청 (6급)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 출석 |
| | | 박민규 | 증인 | 국세청 (6급)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 출석 |
| | | 양우석 | 증인 | 서울중앙지검 검찰주사보(현재파견)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 불출석 |
| | | 오경택 | 증인 | 국세청 (현재파견)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 출석 |
| | | 이진은 | 증인 | 감사원 부감사관 (현재파견)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 출석 |
| | | 임성철 | 증인 | 서울중앙지검 검찰주사보 (현재파견)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 출석 |
| | | 전기용 | 증인 | 경찰청 경정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 출석 |
| | | 주원오 | 증인 | 울산지검 검찰주사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 출석 |

| 출석일 | 출석기관<br>(출석장소) | 성 명 | 구 분 | 직업 및 직위 | 신문요지<br>(감정사항) | 출석<br>여부 |
|---|---|---|---|---|---|---|
| | | 최성열 | 증인 | 감사원 부감사관(현재파견)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 출석 |
| | | 한동훈 | 증인 | 서울청 경감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 출석 |
| | | 윤원일 | 증인 | 대검찰청 형사3과 과장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 불출석 |
| | | 정교화 | 증인 |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 -망무임승차 관련<br>-한국시장수익금및K-컨텐츠시장재투자 관련 | 출석 |
| | | 김경훈 | 증인 | 구글코리아 사장 | -인앱결제 관련<br>-유튜브운영정책및검색엔진운영관련<br>-인앱결제정책및규제역차별관련<br>-방발기금및국내사법시스템협조관련 | 출석 |
| | | 안철현 | 증인 | 애플코리아 부사장 | -인앱결제 정책 및 규제역차별 관련 | 출석 |
| | | 허욱 | 증인 |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 |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 출석 |
| | | 백승재 | 증인 | 팬트리 대표 | -디지털성범죄 관련 | 출석 |
| | | 케일리블레어 | 증인 | 온리팬스 대표 | -디지털성범죄 관련 | 확인불가 |
| | | 정찬용 | 증인 | SOOP 대표이사 | -BJ-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및 청소년도박 | 불출석 |
| | | 김수향 | 증인 |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 | -뉴스제평위 관련<br>-치지직음란물영상 | 출석 |
| | | 우오현 | 증인 | SM그룹 회장 | -지역 민영방송 지배구조 현황 및 SM그룹의 UBC울산방송 소유제한 위반 관련 | 불출석 |
| | | 이정환 | 증인 | 울산방송 사장 | -지역 민영방송 지배구조 현황 및 SM그룹의 UBC울산방송 소유제한 위반 관련 | 출석 |
| | | 김경래 | 증인 | 나무뉴스 코리아 대표 | -가짜뉴스 관련 | 불출석 |
| | | 백영훈 | 증인 | 애드온컴퍼니(주) 대표 | -가짜뉴스 관련 | 철회 |
| | | 레지날드 숀 톰슨 | 참고인 | 넷플릭스 코리아 사장 | - 망무임승차 관련<br>-한국시장수익금및K-컨텐츠시장재투자 관련 | 불출석 |
| | | 마크리 | 참고인 | 애플코리아 사장 | -인앱결제 정책 및 규제역차별 관련 | 불출석 |
| | | 김은영 | 참고인 |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온라인 플랫폼 기사 중국발 댓글 관련 | 불출석 |
| | | 홍석훈 | 참고인 |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 교수 | -온라인 플랫폼 기사 중국발 댓글 관련 | 불출석 |
| | | 강필구 | 증인 |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방통위 관련 국정감사 | 출석 |
| 10. 8.<br>(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br>우주항공청 등<br>국정감사 | 송현주 | 증인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출연연 관련 질의 | 출석 |
| | | 강정아 | 증인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경영지원실장 | -한림원 성희롱·갑질 관련 | 출석 |

| 출석일 | 출석기관<br>(출석장소) | 성 명 | 구 분 | 직업 및 직위 | 신문요지<br>(감정사항) | 출석<br>여부 |
|---|---|---|---|---|---|---|
| | (과기부청사) | 유욱준 | 증인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 -한림원 성희롱·갑질 관련 | 출석 |
| | | 이창희 | 증인 | 한국과학기술한림원<br>총괄부원장 | -한림원 성희롱·갑질 관련 | 출석 |
| | | 강흥식 | 증인 | 포항가속기 연구소 소장 | -포항 가속기연구소 비리의혹 관련 | 출석 |
| | | 김영섭 | 증인 | KT 대표 | -KT 최대주주변경 및 알뜰폰 사업<br>-통신비·단통법관련<br>-불법전환영업및협력업체상생관련<br>-기간통신사업자KT의불법·위법적고객통신감청및패킷위변조와검찰출신등전관예우로인한폐해관련<br>-고인상대요금청구및약정만료전미통보관련(타통신사별건),통신사멤버십혜택<br>-KT최대주주변경과기정통부공익성심사관련<br>-LTE3축사업관련<br>-통신이용자품질관련 | 출석 |
| | | 김경훈 | 증인 | 구글코리아 | - 디지털세 및 딥페이크 관련<br>-구글앱마켓갑질논란<br>-국내·외OTT요금관련 | 출석 |
| | | 임봉호 | 증인 | SKT (커스터머 사업부장) | -알뜰폰 사업<br>-단통법 관련<br>-통신사멤버십혜택,가계통신비,단통법 통신정책관련 | 출석 |
| | | 안철현 | 증인 | 애플코리아 부사장 | -디지털세 및 국내 이용자차별 관련<br>-인앱결제관련 | 출석 |
| | | 김흥수 | 증인 | 현대자동차 GSO(부사장) | -KT 최대주주변경 | 출석 |
| | | 김태현 | 증인 | 국민연금 이사장 | -KT 최대주주변경 | 출석 |
| | | 서원주 | 증인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 -KT 최대주주변경 | 출석 |
| | | 정교화 | 증인 | 넷플릭스 코리아<br>정책법무총괄 | -국내외 OTT 요금 관련 | 출석 |
| | | 김창욱 | 증인 | 스노우 대표이사 | -딥페이크 관련 | 출석 |
| | | 원흥재 | 증인 | HCN 대표이사 | -불법 전환영업 및 협력업체 상생 관련 | 출석 |
| | | 최영범 | 증인 |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 -불법 전환영업 및 협력업체 상생 관련 | 출석 |
| | | 정호진 | 증인 |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 | -중저가단말기 | 출석 |
| | | 정수헌 | 증인 | LGU+ (컨슈머부문장) | -단통법 관련<br>-공정위조사담합협의관련<br>-알뜰폰사업<br>-통신사멤버십혜택,가계통신비,단통법 통신정책관련<br>-통신이용자품질관련 | 출석 |
| | | 이우일 | 증인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R&D 예산 관련 질의 | 출석 |

| 출석일 | 출석기관<br>(출석장소) | 성 명 | 구 분 | 직업 및 직위 | 신문요지<br>(감정사항) | 출석<br>여부 |
|---|---|---|---|---|---|---|
| | | 손재일 | 증인 | 한화에어로스페이스<br>공동대표 | -한국형 발사체 지적재산권<br>-항공우주연구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br>분쟁관련 | 출석 |
| | | 김형숙 | 증인 | 한양대<br>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br>한양대<br>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 | -R&D 이권 카르텔 관련 | 출석 |
| | | 김성한 | 참고인 | 민주노총 대학노조<br>포항공대지부장 | -포항 가속기연구소 비리의혹 관련 | 출석 |
| | | 마크리 | 참고인 | 애플코리아 사장 | -디지털세 및 국내 이용자차별 관련<br>-인앱결제관련 | 불출석 |
| | | 정의선 | 참고인 | 현대자동차 회장 | -KT 최대주주변경 | 불출석 |
| | | 레지널드<br>숀 톰프슨 | 참고인 | 넷플릭스 코리아 대표 | -국내외 OTT 요금 관련 | 불출석 |
| | | 강지남 | 참고인 | HCN비정규직 노조 | -불법 전환영업 및 협력업체 상생 관련 | 출석 |
| | | 노태문 | 참고인 | 삼성전자 (MX사업부장) | -중저가단말기 | 불출석 |
| | | 문성모 | 참고인 |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br>(총연합회장) | -R&D 예산 관련 질의 | 불출석 |
| | | 정두호 | 참고인 |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br>(지부장) | -R&D 예산 관련 질의 | 출석 |
| | | 신명호 | 참고인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br>정책위원장 | -R&D 예산 관련 질의 | 출석 |
| | | 신민기 | 참고인 | 입틀막 대책위 공동대표 | -R&D 예산 관련 질의 | 출석 |
| | | 하정우 | 참고인 | 네이버클라우드<br>IC이노베이션센터 센터장 | -AI현안관련 | 출석 |
| | | 김승일 | 참고인 | 모두의연구소 대표 | -AI현안관련 | 출석 |
| | | 최재식 | 참고인 | KAIST 설명가능<br>인공지능연구센터장 | -AI현안관련 | 출석 |
| 10. 10.<br>(목) | 원자력안전위원회 등<br>국정감사<br>(국회) | 도세호 | 증인 | 비알코리아대표 | -디지털포용정책 및 키오스크 관련 | 철회 |
| | | 최남용 | 증인 | KCA 전)기금운용본부장 | -옵티머스펀드 투자결정 관련 | 불출석 |
| | | 변종인 | 증인 | KINS 책임연구원 | -제논탐지장비 관련 | 출석 |
| | | 윤주용 | 증인 | KINS 책임연구원 | -제논탐지장비 관련 | 출석 |
| | | 함돈식 | 증인 | KINS 책임연구원 | -제논탐지장비 관련 | 출석 |
| | | 오세철 | 증인 | 삼성물산 대표 | -하청업체 도산 및 자금지급 실태 파악 | 철회 |
| | | 김성암 | 증인 | 한국전력기술 사장 | -내진설계 변경에 대한 질의 | 출석 |
| | | 윤태양 | 증인 | 삼성전자 CSO(부사장)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관련 | 출석 |
| | | 이정윤 | 참고인 |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신한울 3·4호기 건설 승인<br>-한빛원전주민공청회파행 관련<br>-원자력안전관리문제점 지적 | 출석 |
| | | 정현걸 | 참고인 | 경주환경운동연합 대표 |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 출석 |
| | | 김용국 | 참고인 | 한빛원전<br>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 -한빛원전 수명연장 관련 | 철회 |

| 출석일 | 출석기관<br>(출석장소) | 성 명 | 구 분 | 직업 및 직위 | 신문요지<br>(감정사항) | 출석<br>여부 |
|---|---|---|---|---|---|---|
| | | 한병섭 | 참고인 |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 | -한빛원전 수명연장 관련 | 출석 |
| | | 박미경 | 참고인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한빛원전 주민 공청회 파행 관련 | 불출석 |
| | | 손우목 | 참고인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사고 관련 | 철회 |
| | | 이용규 | 참고인 |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직원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사고 관련 | 철회 |
| | | 이종웅 | 참고인 | ㈜임진종합건설 대표 | -신한울 3·4호기 건설 하청업체 경영난에 대한 질의 | 출석 |
| | | 한선규 | 참고인 | 삼성물산 부사장 | -신한울 3·4호기 및 체코 원전에 대한 질의 | 출석 |
| 10. 14.<br>(월) | 한국방송공사 등 국정감사<br>(국회) | 신용목 | 증인 | 서울시립대 교수 | -공영방송 장악 관련<br>-수신료분리징수국민청원관련 | 출석 |
| | | 서기석 | 증인 | KBS 이사장 | -공영방송 장악 관련<br>-KBS사장임명제청과정관련 | 불출석 |
| | | 정재권 | 증인 | KBS 이사 | -공영방송 장악 관련<br>-KBS사장임명제청과정관련 | 출석 |
| | | 이석래 | 증인 | 전 KBS 이사 | -공영방송 장악 관련 | 출석 |
| | | 김동윤 | 증인 | KBS 편성본부장 | -광복절 '나비부인' 편성 사태 관련 | 출석 |
| | | 조애진 | 참고인 | 언론노조 KBS본부 수석부본부장 | -공영방송 장악 관련 | 출석 |
| | | 윤창현 | 참고인 |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공영방송 장악 관련 | 출석 |
| | | 이호찬 | 참고인 | 언론노조 MBC본부 본부장 | -공영방송 장악 관련 | 출석 |
| | | 박상현 | 참고인 | 언론노조 KBS본부장 | -공영방송 장악 관련<br>-KBS내부상황증언등<br>-KBS운영관련 | 출석 |
| | | 김승준 | 참고인 | KBS 기술협회장 | -KBS 내부상황 증언 등 | 출석 |
| | | 노태영 | 참고인 | KBS 기자협회장 | -KBS 내부상황 증언 등 | 불출석 |
| | | 오정환 | 참고인 |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 |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 관련 | 출석 |
| | | 문호철 | 참고인 | 전)mbc 보도국장 |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 관련 | 출석 |
| | | 강명일 | 참고인 | mbc 제3노조 위원장 |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 관련 | 출석 |
| | | 허무호 | 참고인 | 전)mbc 기자 |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 관련 | 출석 |
| 10. 15.<br>(화) |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br>(국회) | 마채숙 | 증인 |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 -TBS 방송사 존폐 관련<br>-서울시TBS담당부서책임및조치내역관련 | 출석 |
| | | 김별희 | 증인 | (전) TBS PD | -TBS 방송사 존폐 관련<br>-서울시TBS담당부서책임및조치내역관련 | 출석 |
| | | 송원섭 | 증인 | (전) TBS 라디오 본부장 | -TBS 방송사 존폐 관련<br>-서울시TBS담당부서책임및조치내역관련 | 출석 |
| | | 김병민 | 증인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TBS 방송사 존폐 관련<br>-서울시TBS담당부서책임및조치내역관련 | 철회 |
| | | 이강택 | 증인 | (전)TBS 대표 | -TBS 방송사 존폐 관련 | 출석 |

| 출석일 | 출석기관<br>(출석장소) | 성 명 | 구 분 | 직업 및 직위 | 신문요지<br>(감정사항) | 출석<br>여부 |
|---|---|---|---|---|---|---|
| | | | | | -서울시TBS담당부서책임및조치내역관련 | |
| | | 정태익 | 증인 | (전)TBS 대표 | -TBS 방송사 존폐 관련 | 출석 |
| | | 이성구 | 증인 |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 | -TBS 방송사 존폐 관련 | 출석 |
| | | 이승완 | 증인 | 대한태권도협회(KTA)<br>전)회장 현)원로 | -YTN 민영화 관련 | 철회 |
| | | 김현우 | 증인 | YTN 기획조정실장 | -YTN 민영화 관련 | 불출석 |
| | | 김장현 | 증인 | 한전 KDN 대표이사 | -YTN 민영화 관련 | 출석 |
| | | 박종문 | 증인 | 삼성증권 대표이사 | -YTN 민영화 관련 | 철회 |
| | | 안창호 | 증인 |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 | -YTN 민영화 관련 | 철회 |
| | | 윤병운 | 증인 | NH투자 증권 대표이사 | -YTN 민영화 관련 | 출석 |
| | | 윤훈수 | 증인 | 삼일회계 법인 대표이사 | -YTN 민영화 관련 | 철회 |
| | | 정기환 | 증인 | 한국마사회 회장 | -YTN 민영화 관련 | 출석 |
| | | 정성학 | 증인 | 전 한전KDN 감사 | -YTN 민영화 관련 | 철회 |
| | | 이상인 | 증인 | 전) 방송통신위원회<br>부위원장 | -YTN 민영화 관련 | 불출석 |
| | | 김진구 | 증인 | 유진 ENT 대표이사 | -YTN 민영화 관련 | 출석 |
| | | 배석규 | 증인 | 유진 ENT 사외이사 | -YTN 민영화 관련 | 불출석 |
| | | 유순태 | 증인 | 유진홈센터 대표이사 | -YTN 민영화 관련 | 철회 |
| | | 유경선 | 증인 | 유진그룹 회장 | -YTN 민영화 관련 | 불출석 |
| | | 김백 | 증인 | YTN 사장 | -YTN 민영화 관련 | 불출석 |
| | | 최원석 | 증인 | 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 -TBS 방송사 존폐 관련 | 출석 |
| | | 강철원 | 증인 | 현 서울시 시정고문<br>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 -TBS 방송사 존폐 관련 | 출석 |
| | | 박대준 | 증인 | 삼일회계법인 deal 부문<br>대표 | -YTN 민영화 관련 | 출석 |
| | | 이충훈 | 증인 | 삼성증권 부사장(IB<br>부문장) | -YTN 민영화 관련 | 출석 |
| | | 송지연 | 참고인 | 전국언론노동조합 TBS<br>지부장 | -TBS 방송사 존폐 관련 | 출석 |
| | | 이정환 | 참고인 | TBS 노동조합 위원장 | -TBS 방송사 존폐 관련 | 불출석 |
| | | 유석훈 | 참고인 | 유진그룹 경영혁신부문<br>사장 | -YTN 민영화 관련 | 불출석 |
| | | 홍성재 | 참고인 | 유진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 -YTN 민영화 관련 | 불출석 |
| | | 고한석 | 참고인 | 언론노조YTN지부 지부장 | -YTN 민영화 관련 | 출석 |
| | | 김동찬 | 참고인 | 언론개혁 시민연대<br>정책위원장 | -YTN 민영화 관련 | 출석 |
| | | 박종섭 | 참고인 | 한전KDN 노조위원장 | -YTN 민영화 관련 | 불출석 |
| | | 홍기복 | 참고인 |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 | -YTN 민영화 관련 | 불출석 |
| 10. 17.<br>(목) | 산하 연구기관<br>국정감사<br>(대전) | 김남신 | 증인 | 전)한국생명공학연구원<br>연구원 | -부정연구관련 | 철회 |
| | | 이광우 | 증인 | 울산과기원 상임감사 | -감사실 업무 관련 | 출석 |

| 출석일 | 출석기관<br>(출석장소) | 성 명 | 구 분 | 직업 및 직위 | 신문요지<br>(감정사항) | 출석<br>여부 |
|---|---|---|---|---|---|---|
| | | ○○○ | 참고인 | ○○○ | -표준연 관련 | 출석 |
| | | 정순천 | 참고인 | 전)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 | -부정연구관련 | 출석 |
| | | 서성원 | 참고인 | KAIST 선임연구원 | -KAIST 여성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문제 | 출석 |
| | | 심은형 | 참고인 | KAIST 위촉행정원 | -KAIST 여성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문제 | 출석 |
| | | 임철호 | 참고인 | 전)항공우주연구원 원장 | -항우연 운영관련 | 출석 |
| | | 류지열 | 참고인 |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원 | -늘봄학교, 디지털인재양성, IT용역, 대한수학교육학회 등 재단 운영 관련 질의 | 불출석 |
| | | 제동국 | 참고인 | 과기계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조위원장(책임연구원) | -연구 환경 및 과학기술 연구 중요성 | 출석 |
| | | 이어확 | 참고인 |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지부장(책임연구원) | -연구 환경 및 과학기술 연구 중요성 | 출석 |
| | | 이준영 | 참고인 |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 -연구 환경 및 과학기술 연구 중요성 | 출석 |
| 10. 21.<br>(월) | 방상통신심의위원회<br>(국회) | 마컴 에릭슨 | 증인 | 구글 부사장 | -구글의 유튜브 신속조치 약속 관련 질의 | 철회 |
| | | 김도균 | 증인 | 클라우드 플레어 지사장 |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규제 관련 | 출석 |
| | | 김유식 | 증인 | 디시인사이드 대표이사 | -우울증갤러리 자율규제내역 및 대응방안 질의 | 불출석 |
| | | 최유석 | 증인 | YTN 경영지원 실장 | -청부민원 관련 | 불출석 |
| | | 김현우 | 증인 | YTN 기획조정실장 | -청부민원 관련 | 불출석 |
| | | 정철민 | 증인 | YTN 인사팀장 | -청부민원 관련 | 불출석 |
| | | 류희목 | 증인 | 영남선비문화수련원 사무총장 | -청부민원 관련 | 불출석 |
| | | 이다현 | 증인 | 리어예술단(주식회사 리어아트 컴퍼니) | -청부민원 관련 | 불출석 |
| | | 김흥수 | 증인 | 방심위 특위 위원 | -청부민원 관련 | 출석 |
| | | 박우귀 | 증인 | 방심위 특위 위원 | -청부민원 관련 | 불출석 |
| | | 허연회 | 증인 | 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 -청부민원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 불출석 |
| | | 강경필 | 증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 -청부민원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 출석 |
| | | 김정수 | 증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 -청부민원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 출석 |
| | | 황성욱 | 증인 | 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 —청부민원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 불출석 |
| | | 김정한 | 증인 | 방심위 운영지원팀 직원 | -청부민원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 출석 |

| 출석일 | 출석기관<br>(출석장소) | 성 명 | 구 분 | 직업 및 직위 | 신문요지<br>(감정사항) | 출석<br>여부 |
|---|---|---|---|---|---|---|
| | | 김종인 | 증인 | 방심위 민원상담팀 직원 | -청부민원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 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 불출석 |
| | | 이선태 | 증인 | imbc 대표 | -방통위 현안질의 | 철회 |
| | | 이상우 | 증인 | kbs 미디어 대표 | -방통위 현안질의 | 출석 |
| | | 김은미 | 증인 | 제너럴 에이전트 대표 | -국내 대리인 제도 | 철회 |
| | | 김대남 | 증인 | 현 SGI 서울보증<br>상근감사위원<br>전 대통령실<br>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 -청부민원 관련 | 불출석 |
| | | 김봉식 | 증인 | 서울경찰청장 | -공익제보자 색출수사의 문제점 | 불출석 |
| | | 안동현 | 증인 | 서울중부경찰서장<br>(전 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 -공익제보자 색출수사의 문제점 | 불출석 |
| | | 윤정근 | 증인 | 양천경찰서장 | -청부민원 수사 부진 문제점 | 불출석 |
| | | 유철환 | 증인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청부민원 의혹 편파부실조사 | 불출석 |
| | | 정승윤 | 증인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청부민원 의혹 편파부실조사 | 확인불가 |
| | | 김정대 | 증인 | 국민권익위원회<br>부패방지국<br>청렴정책총괄과장 | -청부민원 의혹 편파부실조사 | 출석 |
| | | 이항노 | 증인 | 국민권익위원회<br>부패방지국<br>행동강령과장 | -청부민원 의혹 편파부실조사 | 출석 |
| | | 홍영철 | 증인 | 국민권익위원회<br>신고자보호과 과장 | -청부민원 의혹 편파부실조사 | 출석 |
| | | 박홍상 | 증인 | 국민권익위원회<br>긴급고충조사과장 | -청부민원 의혹 편파부실조사 | 출석 |
| | | 주경희 | 증인 | 국민권익위원회<br>보호보상정책과장 | -청부민원 의혹 편파부실조사 | 출석 |
| | | 김응태 | 증인 | 국민권익위원회<br>심사보호국장 | -청부민원 의혹 편파부실조사 | 출석 |
| | | 이성우 | 참고인 | 방심위 지상파방송팀 팀장 | -청부민원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 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 출석 |
| | | 봉지욱 | 참고인 | 뉴스타파 기자 | -셀프심의 과태료 부과 등 문제점 | 출석 |
| | | 오정환 | 참고인 |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 |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 관련 | 출석 |
| | | 문호철 | 참고인 | 전)mbc 보도국장 |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 관련 | 출석 |
| | | 강명일 | 참고인 | mbc 제3노조 위원장 |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 관련 | 출석 |
| | | 허무호 | 참고인 | 전)mbc 기자 |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 관련 | 출석 |
| | | 김준희 | 참고인 | 언론노조 방심위지부<br>지부장 | -청부민원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 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 출석 |
| | | 탁동삼 | 참고인 | 방심위 연구위원 | -청부민원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 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 출석 |
| | | 이호찬 | 참고인 | 언론노조MBC본부 본부장 | -청부민원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 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 출석 |

| 출석일 | 출석기관<br>(출석장소) | 성 명 | 구 분 | 직업 및 직위 | 신문요지<br>(감정사항) | 출석<br>여부 |
|---|---|---|---|---|---|---|
| 10. 24.<br>(목) | 방송통신위원회<br>등 종합감사<br>(국회) | 윤원일 | 증인 | 대검찰청<br>형사3과 과장 |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관련 등 | 불출석 |
| | | 강한승 | 증인 | 쿠팡 경영관리총괄<br>대표이사 | -플랫폼 관련 | 철회 |
| | | 권혁철 | 증인 | 전)경인방송<br>회장 | -경인방송 관련 등 | 출석 |
| | | 배중섭 | 증인 | 한국정보보호산업<br>협회 상근부회장 | -민생토론회 행사용역 관련 등 | 출석 |
| | | 안종오 | 증인 | ㈜디어유 대표 | -플랫폼 관련 | 철회 |
| | | 우오현 | 증인 | SM그룹 회장 | -SM그룹의 UBC울산방송 소유제한 위반 관련 등 | 불출석 |
| | | 정찬용 | 증인 | SOOP 대표이사 | -BJ-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및 청소년도박 등 | 출석 |
| | | 조동성 | 증인 | 경인방송 등기이사 | -경인방송 관련 등 | 불출석 |
| | | 최준원 | 증인 | 위버스 대표이사 | -플랫폼 관련 | 철회 |
| | | 허욱 | 증인 |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등 | 출석 |
| | | 김대남 | 증인 |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 | -청부민원 관련 등 | 불출석 |
| | | 이상인 | 증인 | 전)방송통신위원회<br>부위원장 | -YTN 민영화 관련 | 불출석 |
| | | 유경선 | 증인 | 유진그룹 회장 | -YTN 민영회 관련 | 불출석 |
| | | 배석규 | 증인 | 유진ENT 사외이사 | -YTN 관련 | 불출석 |
| | | 김백 | 증인 | YTN 사장 | -YTN 민영화 관련 | 불출석 |
| | | 김현우 | 증인 | YTN 기획조정실장 | -YTN 민영화 관련 | 불출석 |
| | | 최유석 | 증인 | YTN 경영지원실장 | -청부민원 및 YTN 관련 | 불출석 |
| | | 정철민 | 증인 | YTN 인사팀장 | -청부민원 및 YTN 관련 | 불출석 |
| | | 원용재 | 증인 | 디어유 CFO | -팬플랫폼 이용자보호 관련 | 철회 |
| | | 주성원 | 증인 | 쿠팡 전무 | -플랫폼 이용자보호 관련 | 출석 |
| | | 서기석 | 증인 | KBS 이사장 | -KBS사장 임명제청 과정 관련 | 불출석 |
| | | 정철화 | 참고인 | 한국모바일게임협회<br>부회장 |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관련 등 | 불출석 |
| | | 윤창현 | 참고인 |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공영방송 장악 관련 | 출석 |
| | | 박상현 | 참고인 | 언론노조 KBS본부장 | -공영방송 장악, KBS 운영 관련 등 | 출석 |
| | | 오정환 | 참고인 |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 |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 관련 | 출석 |
| | | 강명일 | 참고인 | MBC 제3노조 위원장 |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 관련 | 출석 |
| | | 이호찬 | 참고인 | 언론노조 MBC본부장 | -공영방송 장악 관련 | 출석 |
| 10. 25.<br>(금) | 과학기술<br>정보통신부 등<br>종합감사<br>(국회) | 김경훈 | 증인 | 구글코리아 대표 | -유튜브 유해물 콘텐츠 규제 관련<br>-액티브리스닝관련 | 출석 |
| | | 김대환 | 증인 | 한국연구재단<br>기획총괄팀장 | -R&D 예산 삭감 관련 | 출석 |
| | | 김상준 | 증인 | 전)정보통신기획평가원<br>사업총괄팀장 | -R&D 예산 삭감 관련 | 출석 |

| 출석일 | 출석기관<br>(출석장소) | 성 명 | 구 분 | 직업 및 직위 | 신문요지<br>(감정사항) | 출석<br>여부 |
|---|---|---|---|---|---|---|
| | | 허남준 | 증인 | 지에스리테일<br>사업지원부문장 | -입점사 수수료 관련 | 철회 |
| | | 김창경 | 증인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br>위원장 | -과학기술 카르텔 관련 | 출석 |
| | | 김형숙 | 증인 | 한양디지털 헬스케어센터<br>센터장 | -R&D 카르텔 의혹 확인 | 출석 |
| | | 레지널드<br>숀 톰프슨 | 증인 | 넷플릭스 코리아 대표 | -조세회피 등 관련 | 불출석 |
| | | 전승수 | 증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br>사업조정평가본부장 | -R&D 예산 삭감 관련 | 출석 |
| | | 조성경 | 증인 |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br>1차관 | -R&D 이권 카르텔 관련 | 출석 |
| | | 유인태 | 증인 | 모두투어사장 |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관련 | 출석 |
| | | 김영섭 | 증인 | KT 대표 | -KT 최대주주변경 | 출석 |
| | | 윤태양 | 증인 | 삼성전자 CSO(부사장)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관련 | 출석 |
| | | 김진석 | 증인 | ㈜GS리테일 홈쇼핑<br>사업부장(전무) | -입점사 수수료 관련 | 출석 |
| | | 강흥식 | 증인 | 포항가속기 연구소 소장 | -포항 가속기연구소 비리의혹 관련 | 출석 |
| | | 임봉호 | 증인 | SKT(커스터머 사업부장) | -멤버쉽 할인 관련 | 출석 |
| | | 정수헌 | 증인 | LGU+(컨슈머부문장) | -멤버쉽 할인 관련 | 철회 |
| | | 김용국 | 참고인 | 한빛원전<br>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 -한빛원전 수명연장 관련 | 철회 |
| | | 이용규 | 참고인 |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직원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피해자 | 출석 |
| | | 이종섭 | 참고인 | 뷰티피플 대표 | -중소기업 업체 T커머스 판로 확대 필요성 및 실제 어려운 사례 관련 | 출석 |
| | | 정영조 | 참고인 | KT 전략 신사업 기획본부<br>헬스케어 담당 | -정부수탁과제 선정 관련 | 출석 |
| | | ○○○ | 참고인 | ○○○○○○○○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관련 | 출석 |
| | | 손우목 | 참고인 | 삼성전자 노동조합 위원장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관련 | 출석 |
| | | 김성한 | 참고인 | 민주노총 대학노조<br>포항공대지부장 | -포항 가속기연구소 비리의혹 관련 | 출석 |
| | | 정교화 | 증인 | 넷플릭스 코리아<br>정책법무총괄 | -조세회피 등 관련 | 출석 |

## 나. 증인에 대한 질의요지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10. 7. | 이상준(경기남부청 경감),이종민(국세청 5급), 강문우(서울서부지검 검찰주사), 고종현(경찰청 경감), 김기철(경찰청 경정), 김문준(감사원 감사관), 강우진(서울시 혜화경찰서 경감), 박동찬(국세청 6급), 박민규(국세청 6급), 오경택(국세청), 이진은(감사원 부감사관), 임성철(서울중앙지검 검찰주사보), 전기용(경찰청 경정), 주원오(울산지검 검찰주사), 최성열(감사원 부감사관), 한동훈(서울청 경감) | ○ 경찰청, 검찰청, 감사원 등에서 파견 온 증인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보조금 감사 등을 수사관 등이 하였는지, 불법 파견이 아닌지<br>○ 방통위를 특별수사본부로 만든 것이 이 정권의 권력 운용 방식으로, 방통위의 사정기관 진주를 방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곧 발의할 것임.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김수향<br>네이버<br>뉴스서비스총괄<br>전무 | ㅇ네이버가 독점적인 뉴스 유통 지배력을 바탕으로 언론사의 수익기반을 잠식하고 있는데, 언론사 지배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평위를 즉각 해체하고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함.<br>ㅇ아웃링크 전환에 대한 의견수렴 하였는지, 아웃링크 전환을 순차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지<br>ㅇ네이버는 언론사 기사를 AI가 무단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구 약관 조항을 활용해서 기사 저작권을 AI 학습 목적으로 침해하였는데, 해당 학습을 중단하였는지<br>ㅇ제평위 재개에 앞서 아웃링크 선택제 도입, 저작권 침해 배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br>ㅇ제평위에서 추가로 제휴 선정한 건이 몇 건인지, 언론사를 줄세우기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방지는 84개 뉴스콘텐츠 제휴사 중 12개에 불과하는 등 네이버는 뉴스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음.<br>ㅇ최근 한 대학 연구팀이 한중 경쟁산업분야에서 중국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댓글을 게재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연구를 위한 댓글 크롤링은 왜 차단된 상태인지<br>ㅇ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경로의 90%가 네이버 유입으로, 유사 키워드 검색시 서민금융진흥원 링크가 포털에 나타나도록 협의하였는데, 네이버는 노출 빈도가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마련 필요<br>ㅇ네이버에서 조직적 댓글조작 사이트 관리할 필요<br>ㅇ네이버 치지직의 영상 후원 기능 관련하여 원저작자와 스트리머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br>ㅇ제평위에 대하여 지역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 있는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br>ㅇ네이버는 전체 뉴스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질 필요<br>ㅇ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가 여전히 네이버 뉴스 CP사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임.<br>ㅇ 뉴스타파는 네이버 CP사를 대상으로한 제평위 평가 결과 콘텐츠 제휴 합격 매체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제휴 매체 벌점 부여를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CP사로 선정이 된 것임. |
| | 김경훈<br>구글코리아 사장 | ㅇ 구글코리아 작년 매출이 3,650억원으로 네이버 대비 3.8%에 불과함. 인앱 결제나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로 이익을 획득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본사와 달리 구글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수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인지, 매출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br>ㅇ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한국에서 유독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저렴한 학생요금제 및 라이트 요금제 출시할 계획이 있는지<br>ㅇ 음성 정보를 수집해 마케팅하는 액티브 리스닝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런 적이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22년에 과징금 692억을 받은 바 있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br>ㅇ구글은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방통위에서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응이 필요<br>ㅇ 유튜브 계정을 통해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음란성 콘텐츠에 대한 운영기준이 없는지,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br>ㅇ구글은 망사용료 지불하는지,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br>ㅇ 유튜브 광고를 시청하면서 유료 데이터 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광고 시청 데이터 비용은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 ㅇ유튜브 범죄 관련하여 쯔양 사건 등을 보면 빠른 조치가 가능함에도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br>ㅇ구글은 2023년 추정 매출액이 12조 1천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매출액은 3,53억원에 불과하며, 납부법인세는 115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사실상 탈세아닌지<br>ㅇ구글은 인앱결제 강제금지에 불구하고 개발자들을 착취중인데, 과징금 부과하면 납부할 것인지 |
| | 정교화<br>넷플릭스 코리아<br>정책법무총괄 | ㅇ넷플릭스 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이 본사에 비해 매우 저조한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캐나다나 프랑스는 넷플릭스가 OTT 관련 기금을 납부하고 있음. |
| | 이정환<br>울산방송 사장 | ㅇSM 그룹의 울산방송 소유는 방송법 위반이며 방통위의 시정명령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br>ㅇUBC 울산방송의 사내유보금이 바닥나는 상황이고 주말뉴스를 폐지하는 등 운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치할 필요 |
| | 안철현<br>애플코리아<br>부사장 | ㅇ인앱결제할 때 애플에서는 부가세포함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여 수수료를 33% 가져가는 등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br>ㅇ아이폰의 긴급 SOS 서비스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지 않는 문제, 애플인터리전스 한국어 미지원 문제, 아이폰 단말기의 5G 전파 수신장애 문제 등 한국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반면에 아이폰의 가격은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 문제가 있음.<br>ㅇ 경찰서, 소방당국이 요청하는 GPS 정보조차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br>ㅇ애플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 |
| | 허욱<br>페이스북코리아<br>부사장 | ㅇ 메타는 유명인 사칭 등 SNS 허위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지하고 있는지, 메타의 인증마크가 사칭 계정에도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개선될 필요<br>ㅇ 메타는 음란성 콘텐츠에 대한 운영기준 등 해결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 ㅇ메타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 |
| | 백승재<br>프랭크스토어 대표, 팬트리 대표 | ㅇ팬트리는 소속 크리에이터가 사실상 불법 성인물을 판매하는 등 팬트리의 운영 정책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데, 팬트리의 수익을 위해서 방조하는 문제가 있음. |
| 10. 8. | 김경훈<br>구글코리아 사장 | ㅇ 구글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상응하는 세금 납부 필요<br>ㅇ 불법사이트에 대한 스크린시스템 확인 필요 |
| | 임봉호<br>SKT 커스터머 사업부장 | ㅇ LTE 요금 역전문제 대해 검토한 후 합리적인 요금체계 설계 필요<br>ㅇ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키즈폰에 대해 미사용 번호 우선 배정 필요<br>ㅇ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일부기기의 자동로밍 문제 파악 및 개선 필요<br>ㅇ 다이렉트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스마트기기 할인 제공을 대가로 일정 기간 사용을 강제하는 문제 제기<br>ㅇ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통신사 멤버십 혜택 필요<br>ㅇ 통신이용자정보 영장주의 도입시 준수 필요 |
| | 김영섭 KT 대표 | ㅇ LTE요금 역전문제와 선택약정 미고지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br>ㅇ 속도저하 문제에 대한 보상 및 전수조사 등을 검토할 필요<br>ㅇ KT의 PC정보 탈취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br>ㅇ 네이버 등과 같이 법원의 허가가 없는 경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거부 필요<br>ㅇ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가 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br>ㅇ 대표 취임이후 검사들이 주요 요직에 부임하게 된 것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br>ㅇ 김형숙 센터장에 대한 KT의 프로젝트 투자 경위 파악 필요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 ○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일부기기의 자동로밍 문제 파악 및 개선 필요<br>○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통신사 멤버십 혜택 필요<br>○ 통신이용자정보 영장주의 도입시 준수 필요<br>○ 초고속인터넷 설치 관련 불합리한 이용자 부담 전가 개선 필요<br>○ 가입자 사망 이후에도 불합리한 요금이 계속 부과된 경위 확인 및 개선 필요 |
| | 정수헌 LGU+ 컨슈머부문장 | ○ LTE 요금 역전문제 대해 검토한 후 합리적인 요금체계 설계 필요<br>○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일부기기의 자동로밍 문제 파악 및 개선 필요<br>○ 미환급금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br>○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통신사 멤버십 혜택 필요<br>○ 통신이용자정보 영장주의 도입시 준수 필요 |
| |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 | ○ 국내와 해외 태블릿과 휴대폰의 보증기간에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br>○ 국내 삼성 단말기에만 성능이 떨어지는 AP칩셋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지적 제기 |
| |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 ○ KT 스카이라이프의 KT 망사용료 절감이 낙하산인사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한 조사 필요 |
| | 원홍재 HCN 대표 | ○ 블랙필터 설치, 고가상품 판매 유도 등 HCN의 악질적인 행태에 대한 지적 |
| |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 ○ 원가를 과다계상하여 매출원가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했다는 의혹<br>○ 해외에 비해 비싼 국내 아이폰 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 |
| | 정교화 | ○ 넷플릭스 코리아의 매출축소 의혹 제기 및 사회공헌 사업 확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 대 필요성 제시<br>○ 넷플릭스의 대규모 투자로 국내 OTT위기 문제 제기 |
| |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 | ○ AI R&D 수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 제기 |
| |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IC이노베이션센터장 | ○ AI인재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필요<br>○ AI 학습 관련 콘텐츠 제공 강제 문제와 스타트업의 접근성 강화 필요성 제시 |
| |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 ○ 국민연금의 주식매각으로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가 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
| | 김승수 현대자동차 부사장 | ○ 현대차가 KT경영에의 개입의도가 있는 지에 대한 지적 제기 |
| | 이우일 서울대 명예교수 | ○ 국과위의 2024 R&D 예산 심의시 예산삭감 반대의견에도 원안의결한 경위에 대한 답변 필요 |
| |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 | ○ R&D 예산에 대한 국과위의 형식적 의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
| | 김창욱 스노우 대표이사 | ○ 스노우의 딥페이크 관련 문제에 대한 필터링 기술 도입 필요 |
| |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 ○ 발사체 기술 유출 관련 우주항공청과의 분쟁에 대한 경위 및 조사 필요성 제시 |
| | 강흥식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장 | ○ 채용비리, 안전사고 은폐 등에 대한 조사 필요 |
| | 송현주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 R&D 예산 관련 국무조정실의 적극적 역할과 예산 조정 권한 부여 필요 |
| 10. 10. | 윤태양 삼성전자 |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능 피폭 사고의 축소나 은폐 의혹 지적, 원인(부상인지 질병인지) 파악, 피해자에 대한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CSO)부사장 | 적절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필요<br>○ 반도체 수출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세액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법 등 중장기적 혁신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 |
| | 윤주용 · 변종인 · 함돈식<br>KINS 책임연구원 | ○ 제논탐지장비(젬스) 국산화 관련 연구(KINS)에서 연구부정이라는 원안위 감사 결과 및 젬스를 외주 제작한 한진이엔아이 대표와 아는 사이인지 확인 |
| | 김성암<br>한국전력기술<br>사장 | ○ 원자로설계본부의 김천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원자력 클러스터가 모여 경쟁력을 올릴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 10. 14. | 신용목<br>서울시립대 교수 | ○ 국민제안 심사위원장으로서 심사위에서 KBS 장악을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졸속으로 처리함<br>○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투표결과 60% 찬성은 TV 수신료 폐지 관련이고 분리징수는 31.5%에 불과함 |
| | 이석래<br>전 KBS 이사 | ○ 작년 박민사장 선임 투표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후 지난 8월 KBS 이사가 종료되었고 사내게시판에 올린 '사랑하는 KBS 후배 여러분'이라는 글에 뒷조사, 협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협박받은 내용은<br>○ KBS 이사회 사무국 직원들이 KBS 사장의 연임과 관련된 일을 한 것이 이해충돌인지<br>○ 이석래 이사님이 감금 또는 그와 유사한 일을 당한게 사실인지<br>○ 박민 사장의 분리징수로 120억 가량 손실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br>○ 여권 추천 이사로서 방송경력이 사장 선임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지<br>○ 현재 KBS 사장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br>○ 개혁신당은 수신료가 아닌 세금 투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br>○ 10월 14일 이사님께서 받은 구체적인 압박과 음해는 무엇인지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 ○ 사내게시판에 올린 ‘사랑하는 KBS 후배 여러분’ 글에 ‘현 사장의 임명을 제가 반대하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박민 사장 선임에 대한 반대의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br>○ KBS 사장의 임명절차에 절차적으로 부당한 점이 있음 |
| | 정재권<br>KBS 이사 | ○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가 시작된지 한달 반 만에 통합징수에서 분리징수로 바뀌었고 120억 원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br>○ 박민 사장 임명절차 과정에서 박민 사장의 임명이 어려울 것 같아 의사를 바꾼 후 다시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닌지 |
| | 김동윤<br>KBS 편성본부장 | ○ KBS 2023 결산 심사 때 출석하지 않은 이유<br>○ KBS가 광복절에 ‘나비부인’과 ‘기적의 시작’을 편성한데 대한 책임을 질 필요<br>○ ‘기적의 시작’ 편성 준비시 구성원과 갈등이 있었는지, 본부장이 직접 편집 지시를 했는지<br>○ 사의 표명으로 연락도 안되고 증인으로 채택되니까 국회에 나오는 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br>○ ‘나비부인’을 7월 31일에 방영하려고 했는데 올림픽 중계로 8월 15일로 연기한 것이 맞는지<br>○ 국민의 세금과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국가의 정체성에 위반되는 기미가요를 8월 15일 편성한 것은 편성본부장의 직무유기이고 이와 관련된 편성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br>○ 실무자의 반대로 본부장이 제작을 지휘하고 편성을 강행하여 광복절 편성을 한 것은 방송법에 따른 편성권 독립의 취지가 아님 |
| 10. 15. | 마채숙<br>서울특별시<br>홍보기획관 | ○ TBS 폐지조례 관련 역학관계 및 서울시민 의견 청취여부 질의. 관련 내용을 시장에게 건의할 필요<br>○ TBS 민영화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질의 |
| | 김별희<br>(전) TBS PD | ○ 현재 TBS 라디오, TV, 보도 뉴스의 상황 및 현재 심경 질의<br>○ 현재 프로그램 방영 상황 및 10월 이후 프로그램 제작 가능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 여부 질의 |
| | 송원섭<br>(전) TBS<br>라디오본부장 | ○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TBS 폐국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에 대한 의견 질의<br>○ 제작비 미지원 의도에 대한 의견 질의 |
| | 이강택<br>(전) TBS 대표 | ○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TBS 인지도나 재정에 미친 긍정적 영향 질의. TBS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존치될 필요<br>○ TBS가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부분 및 폐국 방지 방안에 대한 질의<br>○ TBS 비영리법인 전환 관련 당시 계획 내용 질의 |
| | 이성구<br>TBS 대표이사<br>직무대행 | ○ 김어준에게 지급한 1회당 출연료 및 총 지급 출연료와 출연료 상한선 규정 변경 여부 질의<br>○ TBS 노영방송화에 대한 입장 질의<br>○ 해고 회피 노력 등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해고 예고이며, 직원 해고에 책임을 느낄 필요<br>○ 직원 해고 사유 및 해고 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질의. 해고 예고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은 적절한 절차가 아님<br>○ TBS 민영화 관련 용역 주체 및 결과에 대한 질의<br>○ 우선협상대상자인 부영과의 접촉 진행상황 질의. 부영은 지역에서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회사로 방송사업자로 부적합함.<br>○ 해고계획 결재 후 사퇴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보임<br>○ 부영과의 우선협상 진행상황 보고 여부 질의<br>○ TBS 민영화에 대한 의견 및 서울시, 서울시의회, TBS이사회의 대응에 대한 평가 질의<br>○ 방통위에 제출한 변경승인신청서 내용 중 이행된 내용 질의. 이행계획서 및 미이행 사유 제출 필요 |
| | 김장현<br>한전KDN<br>대표이사 | ○ 정부 출범 직후 산업부 혁신안에서는 YTN 계속 보유 의사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매각 추진으로 변경된 사유 질의<br>○ YTN에 대한 투자금과 이자 회수 여부 질의. 공기업이 YTN 주식을 소유하는 사태를 방치하여서는 안 됨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 ○ YTN이 향후 수익이 날 전망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 질의<br>○ 여권 인사들의 YTN 매각 촉구 관련 전화 여부 질의<br>○ YTN 매각 결정에 대한 평가 질의<br>○ 한국마사회와 공동매각을 추진한 사유 질의. KDN의 지분과 매입단가가 더 높은 상황에서 공동매각은 부자연스러움<br>○ 만장일치가 이사회 의결 관행임에도 매각 결정은 이례적으로 표결로 의결함. YTN 민영화에 대한 책임을 통감할 필요<br>○ 법률자문 결과 한전KDN과 마사회 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매각 절차라고 하였는데, 이해충돌 요소 해소 방안 질의<br>○ 마사회에서 통매각 요청한 문서 제출 필요<br>○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매입금액이 다른데 매각조건은 동일하게 하여 마사회의 수익률이 훨씬 높은데, 이러한 조건에 동의한 사유 질의 |
| | 윤병운<br>NH투자증권<br>대표이사 | ○ 한국마사회 YTN 주식 매각주관사 포기 사유 질의 |
| | 정기환<br>한국마사회 회장 | ○ 농림부 혁신안과 과거 국정감사에서는 YTN 보유 의사를 밝혔는데 이후 매각 추진된 경위 질의<br>○ 농림부로부터의 YTN 연내 매각 지시 여부 질의 |
| | 김진구<br>유진ENT<br>대표이사 | ○ YTN 민영화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이루어지는 등 민영화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음<br>○ YTN의 123억 티메프 손실과 관련하여 대주주로서 한 조치요구 질의<br>○ 방통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두 달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변경된 사유가 정권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질의<br>○ 김백 사장이 취임 후 YTN 불공정 보도에 대해 사과한 사실인지 여부 질의<br>○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의 인터뷰를 왜곡 인용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 하여 매각신청서를 작성한 사유 질의<br>○ 김백, 배석규 추천인이 누구인지 질의<br>○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한 사유 질의<br>○ YTN 종사자 대표를 만나 종사자들의 주장을 청취하고, 방통위 부과 조건인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반드시 시행할 필요 |
| | 최원석<br>(전) 서울특별시<br>홍보기획관 | ○ TBS 출연금을 삭감한 이유 및 삭감 지시자 질의 |
| | 강철원<br>서울특별시<br>시정고문 | ○ TBS가 현재 사태에 이르게 된 이유 질의<br>○ TBS는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편향 방송사로 자리를 굳혔음<br>○ TBS가 공정성 강화와 자체 재원 조달에 실패한 이유 질의<br>○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브랜드 소유권 및 현재 김어준 씨의 브랜드 무단 사용여부 질의<br>○ TBS 조례 폐지 이후 서울시에서 기울인 정상화 노력 질의<br>○ 독립 법인화 후 서울시의 인사·조직 편성권 관여 여부 질의<br>○ TBS가 과도하게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던 경영 방식에 대한 의견 질의<br>○ 2023년 TBS 민영화 선언 당시 시장과 협의 여부 질의. 오세훈 시장이 책임질 필요<br>○ TBS 방송면허 허가 시 방통위가 재허가 조건으로 서울시의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포함한 바 있었음.<br>○ 김어준·신장식의 김만배 인터뷰 언급 관련하여 서울시가 조사를 추진했는데 방송법 위반 및 언론 자유 침해에 해당할 우려 |
| | 박대준<br>삼일회계법인<br>deal 부문 대표 | ○ 한국마사회 매각주관사 입찰에 뒤늦게 들어간 사유 질의<br>○ 한전KDN과 마사회 매각조건을 동일하게 한 사유 질의 |
| | 이충훈<br>삼성증권 부사장<br>(IB 부문장) | ○ YTN에 대한 한전KDN 지분과 한국마사회 지분이 각각 매각 진행되었는데 업계의 관행 해당 여부 질의<br>○ 한전KDN 매각주관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음날 지위를 포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 기한 사유 질의. 관련 근거문건 및 IB부문 인력현황자료 제출 필요 |
| 10. 17. | 이광우<br>울산과기원<br>상임감사 | ○ 챗GPT활용법 도입을 위한 발리 출장은 외유성 출장으로 보이므로 방만한 예산사용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 10. 21. | 김준희<br>언론노조<br>방심위지부<br>지부장 | ○ 영부인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려 접속 차단하기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br>○ MBC와 뉴스타파에서 대선 3일 전에 보도했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가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지?<br>○ 방통위 팀장 11인이 가짜뉴스 심의 추진 내용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로 부당한 보직해임 등 불이익을 당한 것이 맞는지? |
| | 김응태<br>SK텔레콤<br>부사장 | ○ 공익신고가 되려면 보호하려는 공익이 무엇인지가 있어야 하는데 민원 제기로 어떤 공익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 | 강경필<br>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 ○ 광복절 기미가요 심의에서 KBS 내부 진상조사에 방심위 의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자고 발언을 한 것이 맞는지? |
| | 김홍수<br>방심위 특위 위원 | ○ 2023년 9월 4일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관련 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는지?<br>○ 민원을 제기하기 직전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관련 뉴스 보도는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발언했던 것을 알고 있는지?<br>○ 김대남 씨가 새민연에 사주했다는 관련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이 맞는지? |
| | 홍영철<br>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 과장 | ○ 방심위 직원들의 신고는 공익신고인가? 아닌가? |
| | 김도균<br>클라우드 플레어<br>지사장 | ○ 누누티비나, 티비취키, 후후티비 등 불법사이트가 클라우드 플레어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불법사이트가 클라우드 플레어와 정식 계약을 맺고 서비스가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 되고 있는 것인지?<br>○ 누누티비 방지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삭제 근거를 시행령을 통해 마련한다면 불법사이트 서비스를 적극 삭제할 것인지? |
| 10. 24. | 허욱<br>페이스북코리아<br>부사장 | ○ 메타를 통해 한국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br>○ 메타 후원기능을 통해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을 얻는다면 한국에서 원화로 지급받는지 외화로 지급받는지 |
| | 정찬용<br>SOOP 대표이사 | ○ 2023년부터 엑셀방송 BJ들에게 후원이 몰리면서 SOOP 매출과 당기순이익도 증가하였고, 이에 문제가 발생해도 사업자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br>○ ‘감동란’이라는 BJ가 여성 BJ들이 엑셀방송 참여를 위해 마약과 성매매까지 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맞는지<br>○ 지난 8월 조폭 출신 BJ가 마약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되고, 엑셀방송 BJ 입건, 마약파티 정황 포착으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SOOP에는 BJ들을 보호하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br>○ 인기를 위해 또는 인기방송 출연을 위해 불법에 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BJ 보호규정이 필요<br>○ 작년 롤스로이스남도 범죄수익을 소위 별풍선깡을 통해 세탁을 하는 등 엑셀 방송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 SOOP에서 고액후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방송이 엑셀방송 아닌지<br>○ 한 방송에서만 순수한 후원으로만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후원이 이루어지고, 2020년 별풍선깡으로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거되는 등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br>○ 빚으로 인한 고액후원자의 자살사건, 사행성 조장 등 여러 사안과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br>○ 스트리머와 게이머가 도전 미션 등으로 사실상 사행성 도박을 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는바, 이를 살펴보고 방지할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 필요 |
| | 권혁철<br>전) 경인방송<br>회장 | ○ 경인방송 처음 인수할 때 대표였고, 조동성 회장의 아들과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조동성 회장하고 특수관계가 아닌지<br>○ 주주간 추가합의서에 있는 권영만과도 특수관계 아닌지<br>○ 방송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40%가 넘으면 안되나, 조동성, 권혁철, 권영만 지분 총합이 41.12%로, 법적으로 다툼이 있지 않은지<br>○ 방통위가 올해 경인방송 재허가 심사시 이러한 관계나 주주 간 소송전을 알고 있지 않았는지<br>○ 이면계약서인 주주간 추가합의서가 경인방송 인수 전에 체결되었고, 권혁철 증인은 조동성 등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해서 16.11% 지분을 가지기로 합의했던 것인지<br>○ 이면계약 후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때는 40% 제한에 걸리지 않는 지분표로 승인을 받았고, 이는 방통위를 속인 것이 아닌지<br>○ 실제 보유 지분이 16.11%인지 1.5%인지, 인수 당시 조동성과의 실질적인 지분을 합치면 40%가 훨씬 넘지 않은지 |
| | 주성원<br>쿠팡 전무 | ○ 와우멤버십 월정액 요금 인상이 있었지만, 이용제한에 대한 기준 설명이나 소명기회 부재 등 사용자 경험 측면의 잘못 존재 |
| | 배중섭<br>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 방통위 2인구조 의결의 합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했는지<br>○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실무 책임자 아니었는지 |

## 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요지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10. 8. | 신민기 입틀막 대책위 공동대표 | ○ R&D 삭감으로 인한 피해 사례 설명 필요 |
| | 최재식 KAIST 설명가능 인공지능연구센터장 | ○ 운동학적 관점에서 자폐 등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연구실적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의 |
| | 김성한 민주노총 대학노조 포항공대지부장 | ○ 포항가속기연구소장 취임 후 채용비리, 안전사고 은폐 등에 대한 감사 필요 |
| | 정두호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장 | ○ R&D 예산 감액으로 인해 청년연구원들의 인건비 문제에 대한 조치 필요 |
| 10. 10. | 이종웅 ㈜임진종합건설 대표 | ○ 새울 3·4호기 건설 협력업체들 중 도산한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고, 도산에 이르게 된 사유는? |
| | 정현걸 경주환경운동연합 대표 | ○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안전성과 관련하여 일본이나 독일식 저장시설보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항공기 충돌·재해에 대한 평가 없이 건설되었다는 지적 |
|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 원전 운영에서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바, 지역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적극적으로 할 필요<br>○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신규 원전 건설이나 가동 원전 수명 연장 시 내진설계 철저히 할 필요 |
| | 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 | ○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고리 2·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무용화된 문제 지적 |
| 10. 14. | 조애진 언론노조 KBS 본부 수석부본부장 | ○ 박민사장 취임 후 시사교양국을 폐지한다는 말도 있는데 시사교양 PD 출신으로서 제작 자율성 파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br>○ 광복절 '기적의 시작' 방송 시 김동윤 편성본부장이 직접 종합편집을 했는데 그 사유는<br>○ 개혁신당의 공영방송 사장 방송경력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br>○ MBC는 MBC 출신이 경영을 맡았는데 KBS는 비방송 경험자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 가 많이 오는 이유는<br>○ 세월호 10주기 다큐를 지난해 12월부터 논의하고 4월에 방영하기로 한게 맞는지<br>○ 다큐 인사이트 기획안을 보면 세월호 10주기 특집인데 박민 사장은 세월호 특집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알수 없는 이유로 1월 말에 이제원 본부장이 중단지시를 내렸음 |
| | 윤창현<br>전국언론노조<br>위원장 | ○ KBS 기술본부 팀장 53명의 보직 사퇴의 원인은<br>○ MBC와 SBS는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지<br>○ 단체협약상 공정방송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조치는 임명동의제가 유일하다고 봄<br>○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하고 움직였는지 |
| | 이호찬<br>언론노조 MBC<br>본부장 | ○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가 시작된지 한달 반 만에 통합징수에서 분리징수로 바뀌었고 120억 원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br>○ 박민 사장 임명절차 과정에서 박민 사장의 임명이 어려울 것 같아 의사를 바꾼 후 다시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닌지 |
| | 박상현<br>언론노조 KBS<br>본부장 | ○ KBS 2023 결산 심사때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br>○ KBS가 광복절에 ‘나비부인’과 ‘기적의 시작’을 편성한데 대해 책임을 질 필요<br>○ ‘기적의 시작’ 편성 준비시 구성원과 갈등이 있었는지, 본부장이 직접 편집 지시를 했는지<br>○ 사의 표명으로 연락도 안되고 증인으로 채택되니까 국회에 나오는 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br>○ ‘나비부인’을 7월 31일에 방영하려고 했는데 올림픽 중계로 8월 15일로 연기한 것이 맞는지<br>○ 국민의 세금과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국가의 정체성에 위반되는 기미가요를 8월 15일 편성한 것은 편성본부장의 직무유기이고 이와 관련된 편성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br>○ 실무자의 반대로 본부장이 제작을 지휘하고 편성을 강행하여 광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 복절 편성을 한 것은 방송법에 따른 편성권 독립의 취지가 아님 |
| | 김승준<br>KBS 기술협회장 | ○ 한국방송기술인협회장 근태사항 검토보고 문건이 있고, 김 협회장 퇴근 이후까지 조사가 된 것인지<br>○ 10월 8일 기술본부 팀장 53명이 보직사퇴하면서 사장의 조직개편에 반대한 사유 |
| | 오정환<br>MBC 제3노조<br>비상대책위원장 | ○ 유튜브수익금 사용내역 보고<br>○ MBC 등의 방송 보도가 과학적 분석과 확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균형감각이 있는 보도인지 여부 |
| | 문호철<br>전 MBC<br>보도국장 | ○ MBC는 지상파를 쓰는 공영방송이고 국가의 재산인데 뉴스의 균형을 심의하거나 감시할 기관이 없음 |
| | 강명일<br>MBC 제3노조<br>비상대책위원장 | ○ 방문진과 MBC가 지평에 사건을 몰아준 사례<br>○ MBC의 부동산 투자 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 및 관련 자료 보고 |
| 10. 15. | 송지연<br>전국언론노동조합<br>TBS지부장 | ○ TBS 폐지 조례안 통과 이후 TBS 구성원들의 상태·분위기 및 책임소재 질의<br>○ TBS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 당시 서울시는 예산 지원을 약속하였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과할 필요<br>○ 현재 TBS가 보유한 재산 규모 및 연체 중인 전용 회선료와 송출비 지불 가능성 질의<br>○ TBS가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 질의<br>○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파적이라는 주장과 출연료 200만원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 TBS 종사자들이 고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람<br>○ 시민들과 함께 TBS 원상복귀를 주장할 필요 |
| | 고한석<br>언론노조<br>YTN지부장 | ○ YTN 민영화에 따라 회사가 좀 더 이윤 추구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YTN 구성원들의 의견 및 현재 경영진의 경영에 대한 평가 질의<br>○ 라디오 진행자 신규 임명 관련 정치적 압력 여부에 대한 의견 질의. 외부에서 온 진행자의 경우 내부 구성원들과 달리 외부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br>○ 기업이 방송, 언론을 소유하는 것이 부적합할 수 있음<br>○ 문재인 정권 때 주진우나 김어준 등 유튜버가 뉴스 진행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언론노조에서 비판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질의<br>○ 이진숙 위원장 청문회 당시 경내 시위에 대한 불법성 인지 여부 질의<br>○ 청취율 1위였던 라디오 진행자를 하차시킨 사유 및 하차 하루 전 통보의 이례성 질의. 후임 진행자의 진행이나 언행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견 질의<br>○ YTN 재승인 부가조건과 관련하여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폐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br>○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YTN의 한전KDN과 마사회 지분이 매각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질의<br>○ 방통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두 달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의견 질의<br>○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미준수에 대한 입장 질의<br>○ 유진ENT 및 방통위와 최다출자자 변경 과정에서 소통 여부 질의. 종사자 대표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졸속 심사임 |
| | 김동찬<br>언론개혁<br>시민연대<br>정책위원장 | ○ YTN 매각 동의 여부 질의 |
| | 이정환<br>TBS 노동조합<br>위원장 | ○ 오세훈 서울시장의 TBS 예산 의도 및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 질의 |
| 10. 17. | 심은형<br>KAIST<br>위촉행정원 | ○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이 무엇인지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서성원<br>KAIST<br>선임연구원 | ○ 교수가 퇴직충당금을 직접 부담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개혁이 필요한지 |
| | 정순천<br>전)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 | ○ 연구부정행위 관련 규정과 절차에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
| | 제동국<br>과기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br>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조위원장 | ○ 출연연의 연구환경과 민간부문과의 보수격차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바가 있는지 |
| | 이준영<br>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 ○ 과학기술, 기초과학 또는 공대에 다니는 후배 학생들이 의대로 재입학하는 상황에 대해서 선배로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미래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
| | 이어확<br>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br>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지부장 | ○ 우리나라의 연구 환경 개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
| | 000 | ○ 표준연 내에서 당한 직장내 괴롭힘 등 피해사실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
| 10. 21. | 김준희<br>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지부장 | ○ 류희목 증인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전산망을 활용한 것인지? |
| | 봉지욱<br>뉴스타파 기자 | ○ 뉴스타파에서 기사들을 권익위 신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했다고 했는데, 가족들의 정보는 어떻게 찾아낸 것인지? |
| | 탁동삼<br>방심위 연구위원 | ○ 지금처럼 실무 부서 직원 자리에 연구위원이라는 직함을 만들어서 배치한 것은 징계성 보복 인사가 아닌지? |
| 10. 24. | 박상현<br>언론노조 KBS본부장 | ○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는 방송책임자는 방송의 자유와 시청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제작자들을 지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 책임자들이 이를 수행하고 있는지.<br>○ KBS 노조별 파업에 대한 찬반비율이 어떠한지.<br>○ 공정한 방송을 주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위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 한 방송이 되고 있어 관계자들이 분노하지 않는지.<br>○ 박민사장에 이어 박장범 앵커가 사장후보자가 되었는데 소회가 어떠한지<br>○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됐다’, ‘대통령 술친구가 김여사 머슴에 밀렸다’는 예기가 있는데 동의하는지.<br>○ KBS사장후보자 면접시 이사들이 쪽문으로 들어갔는지, 야권 이사들이 참여했는지<br>○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선임을 의결한 이사들의 결정에 대해 야권 이사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br>○ KBS 45기 기자들이 연명을 통해 박장범 사장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했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br>○ 방송통신위원장, KBS사장후보자 등 정권이 방송을 장악함에 따라 방송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br>○ 방통위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KBS 장악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br>○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로 인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어떠한지<br>○ 박장범 사장체제에서 김건희 여사나 용산 관련 보도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
| | 윤창현<br>전국언론노조<br>위원장 | ○ 방심위 직원을 고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방심위원장을 본 적이 있는지<br>○ 여당 위원들이 방심위 노조에 민원인을 검색해서 확인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br>○ 민원인 IP주소가 우연히 같은 것을 발견하고 언론에 제보했다면 이것은 공익제보가 아닌지<br>○ 방심위 직원 149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 유출로 직원들을 고발했는데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는지<br>○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안되는 문제는 지역 민방만의 문제인지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 ○ 민방에서 소유·경영 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방통위가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
| | 오정환<br>MBC 제3노조<br>비대위원장 | ○ MBC 전 사장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유죄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는지<br>○ 박성제 사장 등의 부당노동행위 유죄의견과 관련해 방문진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br>○ 유산했다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보낸 문자 내용이 무엇인지, 경력기자로 입사했는데 MBC 노조가 장악한 경영자들이 영상편집자로 전직시키려 전보한 점 확인<br>○ MBC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가 끝난 뒤 행정법원 결정으로 임기 연장되고 있는 중에도 발생하는 일인지<br>○ MBC 보도본부 등에서 노조 출신인 보직자는 얼마나 되는지 |
| | 이호찬<br>언론노조<br>MBC 본부장 | ○ 민원인 IP유출과 관련해 방심위에서 낸 보도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br>○ 방통위, 방심위 등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 아닌지, 언론인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림<br>○ 김대남 비서관직무대행에 의한 고발사주나 MBC해체 시위 등 관련 질의 |
| 10. 25. | 김경훈<br>구글코리아 대표 | ○ 크리에이터가 수익금을 배분받을 때 해외에서 송금받는 방법 이외의 경로가 있는지?<br>○ 문제가 되는 콘텐츠가 발생한 계정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br>○ 권리침해 콘텐츠로 인한 수익금의 경우 간편한 절차로서 계좌 동결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br>○ 액티브 리스닝 관련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은지?<br>○ 범죄에 이용되어 문제가 된 인물백과사전 나무위키가 검색 시 최상단에 위치하며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br>○ 인앱결제의 불공정행위 지적에 대한 입장은?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 ○ 한국에서 창출하는 수익에 비하여 납부하는 세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장이 대한민국이므로 국내에 아시아본부를 둘 필요<br>○ 과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매출 세부 항목을 공개할 필요<br>○ 구글의 경우 미국 통신사망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통신사에 캐시 서버를 두고 국내 ISP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지? 넷플릭스와 메타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글만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망 사용료 관련 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br>○ 구글 지도에 독도가 리앙쿠르암 또는 다케시마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시정할 필요 |
| | 김형숙<br>한양디지털 헬스케어센터 센터장 | ○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적이나 이력이 무엇인지?<br>○ 증인과 관련된 사업에 대규모의 예산이 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하여 이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br>○ R&D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하는지?<br>○ 합당한 성과가 없음에도 담당 프로젝트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br>○ 아라온건설, 신화건설 등과 카르텔 관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은? 신화건설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지?<br>○ 증인이 책임연구하고 있는 사업과제가 중복하여 연구비를 받아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br>○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등에 누가 추천을 했는지?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김영섭<br>KT 대표 | ○ 유보신고제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따를 의향이 있는지?<br>○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br>○ 단통법 폐지에 대한 입장은? 단통법 폐지 시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br>○ 해외로밍 요금으로 인한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로밍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br>○ 5G 요금제보다 비싼 LTE 요금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br>○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br>○ 현대차가 KT의 경영에 개입하지 않으려면 현대차가 추천한 2명의 이사가 사외이사로 활동해야 하는 것 아닌지? 1대주주가 현대차로 변경된 이후 그것이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적이 있는지?<br>○ 통신사 가입자가 결제한 영화티켓 가격과 영수증에 표시되는 가격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TF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br>○ KT가 대주주로 있는 HCN의 방송법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br>○ 대규모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통신 대란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br>○ KT 속도저하 문제로 인한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은?<br>○ 스마트워치 등 통신기기에 대한 로밍차단 신청을 가능하게 할 필요<br>○ MS와 KT의 클라우드 및 AI협력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
| | 임봉호<br>SKT(커스터머 사업부장) | ○ SKT 가입자가 혜택을 적용받은 뒤 결제한 영화 티켓 가격과 영수증에 표시되는 가격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 ○ 단통법 폐지에 대한 입장은? 단통법 폐지 시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br>○ 해외로밍 요금으로 인한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로밍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br>○ 태블릿의 경우 자동로밍 차단이 안되는 상황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
| | 윤태양<br>삼성전자 CSO(부사장) | ○ 삼성전자 피폭사고 질병과 부상 중 어느 것으로 보는지? 부상이라고 판단한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br>○ 피폭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 | 이용규<br>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직원 | ○ 피폭 당일 병원 이송 및 진료 상황 |
| | 유인태<br>모두투어 사장 |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통보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험에 들었는지? 보상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 | 이종섭<br>뷰티피플 대표 | ○ TV홈쇼핑 및 T-커머스의 수수료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임에도 중소기업 위주의 T-커머스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의견은? |
| | 김창경<br>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 ○ R&D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하는지?<br>○ 김형숙 교수에 대한 추천을 한 적이 있는지?<br>○ 증인은 이번 정부에서 인수위 위원 및 교육과학기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였는데,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에 대한 걱정이 없는지? |
| | 조성경<br>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 ○ R&D 예산이 깎이는 과정에서 김형숙 증인의 과제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br>○ 과거 증인은 강연에서 R&D 카르텔 유형을 제시한 바 있는데, 카르텔을 없애는데 실무적 역할을 했는지? 현재도 이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 일 자 | 대 상 | 질의 요지 |
|---|---|---|
| | 김진석<br>㈜GS리테일 홈쇼핑 사업부장(전무) | ○ 7개 홈쇼핑의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 | 정교화<br>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및 불복소송에 대한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바우처 사업을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
| | 강흥식<br>포항가속기 연구소 소장 | ○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증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감사를 받게 되면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할 수 있는지? |
| | 김성한<br>민주노총 대학노조 포항공대지부장 | ○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증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감사를 받게 되면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할 수 있는지? |